

#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형성과 변화

연구책임자 | 조정아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형성과 변화

연구책임자 | 조 정 아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NU

통일연구원

##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형성과 변화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형성과 변화 / 조정아 연구책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03)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99-3 93340 : ₩7,000

336.0911-KDC4

331.095193-DDC21

CIP2005002696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형성과 변화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II. 사회주의 교육론의 원리와 적용	9
1. 사회주의 교육론	11
2. 사회주의 교육론의 적용: 맑스 교육이론의 해석과 실험	16
III. 북한 노동인력 양성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23
1. 노동인력 개발 기초 형성기	25
2. 노동인력 양성 제도 정립기	31
3. 사상교육 전면화 시기	45
4. 노동인력 양성 제도 분화 시기	50
5. 교육의 총체적 위기와 IT수재 양성을 통한 극복 모색기	59
IV. 북한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특성	81
1. 당·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노동인력 개발 체계	83
2. 생산과 교육의 결합	86
3. 정시제 교육기관의 발달	92
4. 기술교육과 노동규율 훈련의 결합	97
5. 학교와 생산현장의 연계 체계	102

V. 북한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실제 .....	109
1. 동원을 통한 교육 인프라 확대와 복구 노력의 실제 .....	112
2. 종합기술교육의 변질 .....	118
3. 공장 체제의 문제 .....	123
4. 학교와 생산현장 간 연계 체계의 문제 .....	132
VI. 결론: 정책적 시사점 .....	137
참고문헌 .....	14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3

## 표 목 차

<표 III-1> 중등 컴퓨터 영재교육 현황 비교 .....	73
<표 IV-1> 중등교육과정의 교과 영역별 비중 비교 .....	90
<표 IV-2> 남북한 교육과정 교과 영역별 비중 비교 .....	91

## 그 림 목 차

<그림 I -1>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분석틀 .....	6
------------------------------------	---



# I

## 서론



## 1. 연구 목적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고 개성공업지구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남북경협 활성화 등으로 기업의 북한 진출 및 북한인력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노동력 실태와 특성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는 출발 단계로, 주로 북한의 노동력 실태 파악이나 생산 및 인력관리 제도, 노동 정책을 연구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북한의 노동인력 실태와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북한 노동자들은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기능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며, 낙후된 직업훈련 설비와 기술, 생산설비의 노후화, 대외적 폐쇄성, 전근대적 경영관리방식 등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기능 습득이 어렵다는 견해와 의무교육제도 실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기초 지식이 튼튼하고 열의가 높다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직업훈련 여건의 낙후성과 남북간 노동규율, 노동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북한 노동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북한의 기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인력 양성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새로운 인력 양성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처방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처방은 대부분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

<sup>1</sup> 강일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강일규, “남북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와 협력방안,”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과 전략』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강일규 외,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최중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의 결과로서 도출된 것은 아니다.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노동인력 개발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인력 개발 분야의 장기적인 남북교류 및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구조와 특성에 관한 깊이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노동인력 실태를 평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북한의 정치경제적 역동과 공장 체제의 특성,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관계 속에서 노동인력 개발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시간’의 요소를 투입하여 분석할 때 북한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특성은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형성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각 시기별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노동인력 개발 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제도정책적 환경 속에서 국가와 기업 내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특성을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양성 체계와 직장 내 노동인력 개발 체계, 중등학교와 직장간의 연계 체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노동인력 개발이라 함은 학교 및 직장,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적 자원 개발의 일부로, 중등교육 이수 후 바로 취업하여 일하는 기능인력이나 실업계 고등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을 거쳐 취업하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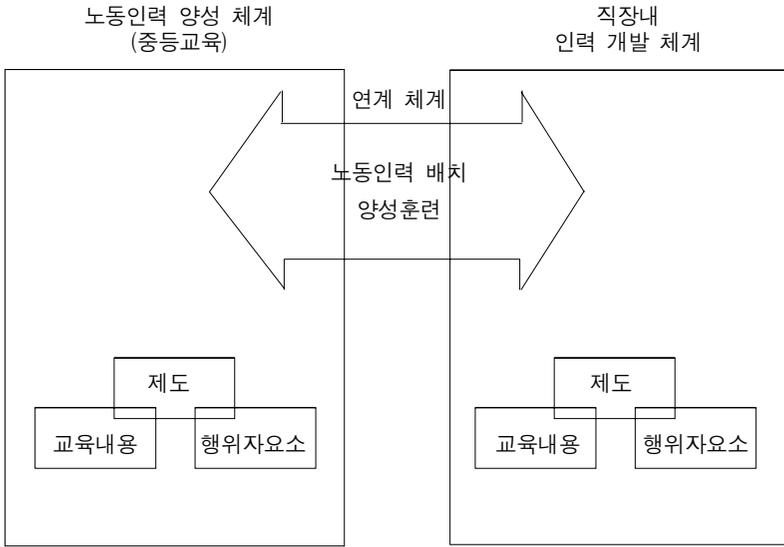
하는 노동자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을 의미한다. 고급과학기술인력 및 전문인력 개발은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인력 개발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예비노동인력 양성체계로서의 중등교육기관, 직장 내 인력 개발 체계, 노동력 배치와 양성훈련(initial training)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와 직장간 연계 체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노동인력 개발의 제도와 정책, 직업기술 및 노동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 개발의 내용, 인력 개발에 대한 인식과 행위자 요소를 분석한다.

노동인력 개발이 이루어지는 세 영역 중 중등교육기관은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예비노동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력 개발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의 교육 체계에서 중등교육은 종결교육의 성격을 띤다. 최근 들어 약간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전통적으로 북한에서는 중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의 졸업생이 군 입대나 취업을 선택한다. 대학 진학을 할 경우에도 소수의 '직통생'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군 복무 후 또는 직장 생활 후에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북한의 중등교육기관은 인문계와 실업계로 이원화되지 않은 단일 교육구조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은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또한 다양한 성인교육 및 재교육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성인교육·계속교육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진행되며, 정치사상교육의 일환으로 노동 규율 및 태도와 관련된 교육이 실시된다. 이 글에서는 종결교육기관과 직장간의 연계 체계에 해당하는 양성훈련기관과 직업 배치 후 직장에서 행정조직과 당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재교육 체계를 고찰한다.

<그림 I-1>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분석틀



이 연구에서 ‘체계’는 행위·조직·제도 등이 일정한 연관성 속에서 상대적 통일성을 지니는 역동적 전체를 의미한다. 이는 “규칙적인 사회적 관행으로 조직된, 행위자들 사이나 집합체들 사이의 재생산된 관계”<sup>2</sup>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조와 행위자 양 차원을 포괄한다. 즉 북한의 경제 및 공장 체제의 특성, 노동인력 개발과 관련된 국가의 제도와 정책, 기업소 내의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역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학교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력 개발은 현실에 있어서는 그 주요 행위자인 국가와 당이 의도한 바 그대로 구현되지는 못한다. 국

<sup>2</sup> 기든스, 윤병철·박영래 역,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 (서울: 문예출판사, 1978), p. 103.

가와 당이 특정한 제도와 교육 목적과 내용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학교와 공장에서 교육과 관계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에 의하여 변형되고 타협된 모습으로 구현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행위자의 역동에 의한 의도의 변형과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노동인력 개발에 대한 북한 주민, 노동자들의 생각과 직업장래의 노동문화를 통하여 그 일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한의 노동 및 교육 분야의 원전을 비롯한 문헌자료 분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이 된 일차자료는 『김일성저작선집』,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등 김일성, 김정일의 저작과, 『교육학』, 『사회주의교육학』등 사범대학의 교육학 교과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 『조선교육사』,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등의 교육 관련 저서, 『교원신문』, 『교육신문』, 『인민교육』, 『교원선전수첩』등의 교육 관련 신문과 정기간행물과, 『우리당에 의한 로동행정 리론의 심화발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 『로동』등의 노동 분야의 저서와 정기간행물이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구술 자료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교사, 중학교 졸업자, 노동자 출신자의 구술을 통하여 제도적, 정책적 측면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실제적인 인력개발 실태와 행위자 역동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현지사례연구가 불가능한 북한 연구에서 구술 자료의 활용은 당국에 의해 생산된 일차적 자료가 갖는 시각의 일방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인력개발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행위자의 행동 및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이 연구에서 인용한 북한이탈주민 20여명의 구술자료는 본 연구자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걸쳐 실시한 면담과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면담 결과이다. 연구에서 인용한 구술 자료와 관련된 인명은 영어 약자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시기별, 지역별, 계층별로 편차가 존재하므로 구술자의 간단한 경력과 출신지역, 면담자, 면담 시기 등을 각주로 밝혀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원자료의 인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II

## 사회주의 교육론의 원리와 적용



## 1. 사회주의 교육론

사회주의 노동인력 양성 정책의 이론적 원천은 맑스(K. Marx)로 거슬러 올라간다. 맑스는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 목표와 내용, 형식에 관한 세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간의 차별을 극복할 필요성, 학습과 생산노동의 결합의 중요성, 모든 사람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일반교육과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가 교육에 관하여 제공했던 아이디어는 ‘전면적으로 발달된 인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인 ‘종합기술교육(Polytechnic Education)’으로 집약된다.

맑스는 자본주의 초기의 직업훈련에서 노동계급 자녀들을 위한 일반교육의 도입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맑스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아동을 위해 생산적 노동을 학업 및 체육에 결합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사회적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육성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sup>3</sup>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맑스의 생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1866년 국제노동자연맹 총회의 ‘제네바 결의문’이다.

우리는 아동과 소년의 노동과 교육을 결합시키지 않는다면 부모와 기업주가 그들에게 노동시킬 수 없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교육을 아래의 세 가지로 이해한다. 첫째는 정신교육, 둘째는 신체교육으로 체육학교에서 그리고 군사훈련을 통해 가르치는 것, 셋째는 기술교육으로 아동과 소년으로 하여금 모든 생산과정의 일반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각종 생산의 가장 간단한 도구를 다루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동과 소년 노동자에게는

<sup>3</sup> 맑스, 김영민 역, 『자본 I-2』 (서울: 이론과 실천, 1990), p. 587.

마땅히 나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신교육, 육체교육과 기술교육과정을 시행하도록 한다. 기술학교의 일부 비용은 학교의 생산품을 팔아 보충하도록 한다. 보수가 있는 생산노동, 정신교육, 육체교육과 기술교육을 결합하면 노동자계급을 귀족과 자본가계급의 수준보다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종합기술교육의 목적은 ‘전면적으로 발달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한 가지 일에 소외된 형태로 종사하는 분업의 결합을 보완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체득케 하는” 것이다.<sup>5</sup> 종합기술교육은 협소한 전문분야에서의 직업기술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적 기술과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연과학을 비롯한 학문적 지식의 획득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기술 교육의 필요성은 근대 산업 체계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한다.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의 끊임없는 변화에 따른 생산기술의 지속적 변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비숙련 산업예비군 풀의 존재라는 산업 환경은 편협한 전문가나 비숙련 노동자가 아닌 폭넓은 일반교육과 다면적 직업기술,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갖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전면적으로 발달된 인간’을 요구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근대적 공업은 기계와 화학적 공정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생산

---

<sup>4</sup> K. Marx, *The First International and After* (Harmondsworth: Penguin, 1974), pp. 88-89; 케슬·뷔스텐베르크, 『사회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푸른나무, 1990), pp. 59-60에서 재인용.

<sup>5</sup> 맑스, 김태성 역, “현대 사회에서의 교육보급에 관한 맑스의 발언기록,” 『맑스 앵겔스 교육론 II』 (서울: 한울림, 1988), pp. 188-189.

의 기술적 기초와 함께 노동자의 기능과 노동과정의 사회적 결합들을 끊임없이 변혁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또 사회 내의 분업을 끊임없이 변혁시키며 또 대량의 자본과 대량의 노동자를 한 생산부문에서 다른 생산부문으로 끊임없이 이동시킨다. 따라서 대공업의 본성은 노동의 전환, 기능의 유동, 노동자의 전면적 가동성을 그 조건으로 삼는다. ... 대공업은 그 파국을 통해서 노동을 진화시키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될 수 있는 한 최대의 다면성을 일반적인 사회적 생산법칙으로 승인할 뿐 아니라 이 법칙의 정상적인 실현에 갖가지 관계들을 적합시키는 것을 자신의 사활문제로 삼는다. 대공업은 또 변화하는 자본의 착취 욕구를 위해 예비로 보유되어져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궁핍한 노동자 인구라는 이 괴성을 변화하는 노동 요구를 위해 인간의 절대적 이용가능성으로 대체하는 것, 곧 하나의 사회적 세부기능의 단순한 담지자인 부분적 개인을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자신의 다양한 활동양식으로 바꿔가며 행하는 전면적으로 발달된 개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자신의 사활의 문제로 삼는다. 대공업의 기초 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이 변혁과정의 한 계기는 공업학교와 농업학교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 노동자의 자식들이 기술학과 갖가지 생산용구의 실제적인 취급에 관해 약간의 수업을 받는 직업학교에서도 찾을 수 있다.<sup>6</sup>

맑스의 종합기술교육의 아이디어는 이후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적인 지향점이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몇 가지 다른 해답이 제시되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 및 성격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논의할 점은 교육이 지니는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이다. 사회체제를 막론하고 교육은 그 사회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이를 계급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의 갈등구조의 재생산이라고 보고,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에 기초한 사회의 유지와 발전이라고 보지만, 결국 양자의 관점 모두 교육이 현 사

<sup>6</sup> K. Marx, 김영민 역, 『자본 I-2』 (서울: 이론과 실천), pp. 590-591.

회를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방식 그대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

재생산이라는 명제는 원래 자본주의 경제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명제이다. 이 명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조건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sup>7</sup> 알튀세(L. Althusser)에 의하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 State Apparatus)의 하나인 교육기관은 개인을 ‘사회적 주체’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존의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알튀세는 모든 사회구성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두 가지의 재생산, 즉 생산력의 재생산과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생산력의 재생산은 물질적 생산조건, 즉 원료, 기계 등의 생산수단의 재생산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의미한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다시 임금 등의 물질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노동력의 생물학적 재생산과 함께 “복잡한 생산과정 체계에서 기능하기에 알맞는 적절한 자질”의 재생산을 포함한다. 알튀세는 이 중 후자에 특히 주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은 생산영역 바깥, 즉 학교이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노동에 필요한 기술의 재생산 뿐만 아니라 기존 질서의 규칙들에 대한 노동자의 복종심 재생산, 즉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심 재생산이나 그 이데올로기의 ‘실천’ 재생산을 포함한다.

한편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이다. 이는 억압적인 국가기구가 제공하는 ‘엄폐물’ 뒤에

---

<sup>7</sup> 김기석, “제도교육, 그 신화와 실상 탐구,” 『교육사회학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87), p. 63.

서 이루어진다. 지배 집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식적 지배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화를 보존·분배하는 학교와 같은 기관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사회통제를 지속시킨다.<sup>8</sup>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교육기관이다.<sup>9</sup> 알튀세의 논의에 의하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장이다.

알튀세가 언급한 교육의 사회재생산 기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은폐되는 데 비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재생산 기능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소련에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위치 지어졌다. 이는 1919년 제7차 러시아 공산당 대회에서 천명된 교육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책결의에 잘 나타나 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 볼셰비키 정당은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시작된 과업을 완수할 것을 목표로 한다. 과업이란 학교가 지금까지는 부르조아 계급의 통치수단으로 뒀지만 계급타파의 무기로 되어야 하며, 사회를 공산주의화시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산계급의 독재기간에 있어서 교육은 그러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하고 공산주의를 완수토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는 일반 대중에게 공산주의 원칙을 견도록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과 계급들의 초급단계적인 무산계급 정신과 비무산계급 정신을 이념과 조직으로 묶고 발전시키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는 완전한 공산주의의 성취를 위하여 대중을 이끌고 훈련해야만 할 것이다.<sup>10</sup>

<sup>8</sup> M. W. Apple, 박부권·이혜영 역, 『교육과 이데올로기』 (서울: 한길사, 1985), p. 13.

<sup>9</sup> 알튀세, 이진수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레닌과 철학』(서울: 백의, 1995), p. 155.

북한에서도 교육은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서, 그 목적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통하여 천명하고 있다.

## 2. 사회주의 교육론의 적용: 맑스 교육이론의 해석과 실험

맑스의 종합기술교육의 아이디어를 실제 교육체계와 내용에서 구현한 첫 국가는 소련이었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의 정치 사회적 역할을 전제로 한 가운데 소련의 교육자들 속에서는 종합기술교육에 관한 몇 가지 해석과 논의, 실천이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에서는 맑스의 종합기술교육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다양한 창조와 상상력의 공간이 펼쳐졌다.

그 중에는 종합기술교육의 목적을 개인의 교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혁명 후 소련 교육은 협소한 전문 교육과 조기 직업선택을 피해 보다 광범위한 일반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직업교육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 교육(general education) 위주의 전통적인 문법학교의 전통에 실질적 기술과 산업생산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키고, 사회 모든 계층의 자녀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였다.<sup>11</sup>

맑스의 유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1920년대 소련 교육 분야의

---

<sup>10</sup> 자스다, 김동규 역, 『소련의 학교교육』 (서울: 주류, 1984).

<sup>11</sup> S. Fitzpatrick,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London · New York ·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5-10.

담론과 실천을 주도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수행과 개인의 성장 추구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상주의적이고 ‘낭만적’인 시도가 그것이다.<sup>12</sup>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까지 복합적 교육과정, 프로젝트학습법, 달틴 플랜을 포함하여,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실험이 행해졌다. 이들은 시험, 숙제, 체벌 등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단순암기와 3R<sup>13</sup> 연습도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과거의 전통적인 ‘책으로만 배우는 학교’를 거부하고 아동의 경험과 흥미에 기반한 학습 방법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가는 샤츠키와 레닌의 부인인 크롭스카야이다. 샤츠키는 1916년 모스크바에서 학교, 작업장, 도서관, 어린이 클럽 등으로 구성된 교육실험장을 조직하고 복합적 교육과정을 적용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교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크롭스카야였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크롭스카야의 지도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2년간 교육에 관한 일련의 포고가 인민위원회 명의로 공표되었다. 이 중에는 사립학교의 국가 접수, 무상·의무교육 실시, 남녀 공학, 등급매기기와 시험 철폐, 체벌과 강제숙제 금지 등의 급진적인 조치가 포함되었다. 1918년 10월에 공표된 포고 중 ‘학교 노동에 관한 원칙’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산노동과 교육의 결합을 명시하였다.

<sup>12</sup> J. Bowen, *Soviet Education: Anton Makarenko and the Years of Experiment*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2), pp. 139-141.

<sup>13</sup> 3R은 읽기(read), 쓰기(write), 셈하기(arithmetic)을 의미한다.

생산노동은 학교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학교를 물질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의 한 방법이자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학교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그것은 교육과 긴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지식의 불빛으로 주변 전체를 밝혀야만 한다.···학교에서의 노동은 창조적이고 즐거우며 아동의 개성에 강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계획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는 학교공동체가 되며, 학교공동체는 학교에서 노동과정을 통해 주변세계의 생활과 밀접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연결된다.<sup>14</sup>

크롭스카야에게 있어 교육과 노동의 결합은 “아동이 집에서 하는 노동을 뜻있고 흥미있게 하며 그들의 관찰력을 일깨워준다는 것”<sup>15</sup>을 의미하였다. 그는 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생산과정을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필수적인 첫걸음으로 생각하였다. 크롭스카야는 노동을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한다면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촉진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노동은 아동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 둘째, 노동은 아동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고, 육체적일 뿐 아니라 정신적이어야 한다. 셋째, 아동은 자기 노동의 결과와 그러한 노동에 자신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넷째, 아동노동은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일의 분야에서 사람들과 전면적으로 관계를 맺고 현실을 관찰하고 삶을 배우고 어릴 적부터 이미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sup>16</sup>

<sup>14</sup> 캐슬·뷔스텐베르크, 이진석 역, 『사회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푸른나무, 1990), pp. 71-72.

<sup>15</sup> 위의 책, p. 73.

맑스의 종합기술교육 이론을 이와는 달리 해석하는 또 다른 부류가 존재하였다. 맑스는 현대 산업의 특성상 한 가지 종류의 기술은 생산과정의 변화에 따라 폐기되기 쉽기 때문에 모든 생산과정의 기본적인 원리와 전 산업부문의 생산에 가장 기초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산업기술의 다양성에 대한 맑스의 강조점에 주목하여 교육의 기술적·산업지향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무엇보다도 공장의 환경과 연결된 기술지향적인 것을 교육해야 하며, 그를 위해 모든 계급의 아동들에게 직업중등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주의 교육의 방향을 맑스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소련의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인성 추구는 사회의 요구에 복종되는 것이었다.

1921년 3월부터 실시된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하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기술자와 전문가의 급속한 양성이 요구되었다. 이전 시기에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신경제정책 하에서 강조되었다. 4년간의 보통교육을 마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 및 실업고등학교가 설립되었고, 1921년에 공장견습공 학교(Factory School for Apprentices)가 설립되어 공장 내에서 직업훈련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920년대 중반에는 교육의 방향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화 되었다.

1928년부터의 5개년계획기에 추진된 본격적인 산업화와 레닌의

<sup>16</sup> 크롭스카야, 한신대학 제3세계문화연구소 역, 『크루프스카야의 국민교육론』 (서울: 돌베개, 1989) p. 65. 크롭스카야는 다른 글(“국민교육과 민주주의”를 쓰기 위한 자료에서,” 같은 책, p. 133)에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이 계급성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으나, “아동의 창조력에 넓은 미래를 부여하고, 사회적 본능에 장래성을 부여하면서 아동의 전인격을 포착”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사망, 스탈린의 집권 등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이전 시기의 다양한 교육적 실험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순종을 위한 훈련, 기간요원 양성과 산업발전 위한 대중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엄격한 형식과 규율을 강조하는 마카렌코 류의 교육이 주류를 접하게 된다.<sup>17</sup> 마카렌코에게 있어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관점, 이상, 신념, 욕구, 행동들이 완전히 집단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끄는 것이었다. 공장에서 진행되는 산업노동을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보웬에 의하면 마카렌코의 노동을 통한 교육에서는 두 가지 교육 목표가 작동하였다.<sup>18</sup> 다양한 산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성장과 사회주의 의식의 배양이 그것이다. 즉, 마카렌코의 교육 이론과 실천의 두 가지 핵심은 노동을 매개로 한 교육과 실생활의 긴밀한 연계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주체인 ‘새로운 소비에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엄격한 집단주의 규율이었다.

1931년에는 프로젝트학습법이 금지되고 학교의 규율이 강화되었으며, 1932년에는 ‘책으로만 배우는 학교’가 부활됨으로써 종합기술 교육이 후퇴하였다. 1930년대의 소련 교육은 한편으로는 마카렌코 교육 이론에서 강조되는 강력한 집단주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핵심적 개념이었던 ‘노동을 통한 교육’이라는 교육 이념이 지향하는 바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변화

<sup>17</sup> 마카렌코와는 달리 크롭스카야는 노동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내부로부터의 규율을 형성시킨다고 보았다. 규율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의식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과정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고, 시간을 배분하고 노동을 조직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내부로부터의 규율을 싹틔울 수 있다고 보았다(크롭스카야, 위의 책, pp. 163-164).

<sup>18</sup> J. Bowen, *Soviet Education: Anton Makarenko and the Years of Experiment*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5), pp. 199-200.

되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혁명 이전의 학문중심적인 교육과정으로 복귀되었으며, 지식교육과 기술교육 및 노동은 분리되는 경향을 띠었다.

교육과 노동, 교육과 생활 간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1950년대 후반에 다시 활발해졌다. 1956부터 1958년까지 소비에트 교육 연구소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학교의 수업을 학교와 공장, 농촌의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생산노동과 결합시키려는 실험 학급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진행하였다. 이어, 후르시초프는 노동과 교육의 결합이라는 종합기술교육의 원리를 견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1958년 11월에 소련은 ‘학교와 실생활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인민교육체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테제’를 발표하고, 곧 이어 12월에는 ‘학교와 사회의 유대 강화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여, 8년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다양한 후기중등교육기관에서 생산노동과 결합된 종합기술교육을 실시할 것과 대학 진학 전 최소 2년간 공장이나 집단농장에서의 노동경험을 의무화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 개정을 단행하였다. 새로운 교육체계의 목표는 학교와 삶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식만이 아니라 노동을 위한 능력과 적합한 태도를 개발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sup>19</sup> 북한을 비롯한 후발 사회주의 국가에 도입된 종합기술교육은 이 시기 소련의 교육을 원형으로 하는 것이었다.

---

<sup>19</sup> E. Krechetova · H. B. Redl (eds.), “Learning from Life to Live,” *Soviet Educators on Soviet Edu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p. 45.



# III

## 북한 노동인력 양성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 1. 노동인력 개발 기초 형성기

해방 직후 북한 주민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았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기간 내내 조선인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방 직후에 높은 비문해율과 기술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은 교육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해방 후 북한 지역의 비문해율은 60%에 달하였다.<sup>20</sup> “모든 근로인민을 문맹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반봉건 혁명’의 주요 과업인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 수행과 산업 건설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었다.

해방 후 ‘민주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교육개혁을 통해 노동인력 개발의 기초가 다져졌다. 1946년에 공표된 ‘20개조 정강’에는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의무교육제 실시와 국가가 경영하는 학교의 확장, 국가 및 경제 건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성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문해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국가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해방 직후에 지식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였던 문해교육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고 교육국에 성인교육부가 설치됨에 따라 국가 주도의 계획적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문맹자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1949년 3월에 이르기까지 3년의

---

<sup>20</sup> 장종식, “북조선 교육의 당면과제,” 『인민』, 11호 (1946); 이향규, 「북한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 63에서 재인용. 이 수치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향규에 따르면, 또 다른 자료(『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에서 밝힌 비문해자수 230만 명을 당시 인구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비문해율은 42%로 계산된다.

기간에 세 차례의 집중적인 농한기 ‘문맹퇴치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는 단순히 글자를 깨우치는 교육이 아니라 일제 잔재 청산과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전 주민을 동원하는 전사회적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1949년 3월에 북한은 ‘문맹퇴치’가 완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후 초등교육 이수 수준의 기초성인교육 체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교육기회의 전면적인 확대와 분배가 이루어졌다. 식민지시기 간이 실용학교 중심의 비체계적인 학제는 보통교육 중심의 초·중·고등교육의 체계적인 연계를 갖춘 학제로 개편되었다. 관·공립학교를 국유화하고 사립학교는 국가의 관리체계 하에 편입하고 점진적으로 청산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sup>21</sup>

국가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이 시기 노동인력 양성에 있어 핵심적 과제였다. 해방 직후 북한의 교육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양적, 질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초급기술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하였던 일제 식민지기 교육 정책의 결과였다.<sup>22</sup>

전문기술인력 및 양성기관의 부족은 국가건설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해방 후 북한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으며,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12명 정

<sup>21</sup>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p. 80-85.

<sup>22</sup> 식민지기에 공업, 농업, 의학, 교육 분야 등 중등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학교가 설치되었는데, 중등학교 입학생 구성을 보면 일본인 학생이 훨씬 많았다. 공과 계열의 경성공업전문학교는 한국학생과 일본학생의 비율이 1:7, 광산전문학교가 1:4, 부산수산학교가 1:6이었다. 신효숙, “북한사회의 변화와 고등인력의 양성과 재편(1945-1960)”, 『현대북한연구』, 제8권 2호 (서울: 한울, 2005), p. 43.

도였다.<sup>23</sup> 현장 기술인력 중에 기사<sup>24</sup>는 약 900명 가량, 기수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극심한 기술인력 부족현상이 야기되었다.<sup>25</sup>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초기 교육개혁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민족간부 양성 기관으로 1946년 10월 1일, 북한 최초의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개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지역에 있었던 두개의 전문학교인 평양공업전문학교와 평양의학전문학교를 모체로 하여 설립되었다. 초기 조직은 공학부, 농학부, 의학부, 문학부, 리학부, 철도공학부, 법학부 등 7개 학부로 구성되었다. 이후 2년간 함흥의과대학, 흥남공업대학, 청진의과대학이 설립되었고, 1948년 9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3개 학부가 분리되어 평양공업대학, 원산농업대학, 평양의학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 3개의 대학은 새로운 대학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대학의 학부를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형태로 설립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방법으로 대학을 증설하였다. 1948년 9월에는 청진의학전문학교와 성진

<sup>23</sup> 김창호, 『조선교육사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p. 116.

<sup>24</sup> 북한의 기술인력은 기능공, 준기사, 기사의 제 수준으로 구분된다. 기능공은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숙련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로, 일반적으로 해당 작업에서 단독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준기사는 중등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주로 현장의 노동조직과 기술지도를 담당하며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국가로부터 기사자격을 수여 받은 기술요원이다. 준기사는 기능공과 기사의 중간적 역할을 담당하며, 중등교육 이수 후에 진학하는 2~3년제 고등전문학교 졸업자에게는 준기사 자격이 주어진다. 준기사는 산업화시기에는 기사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기사는 일정 분야의 고등지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 요원으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여 국가로부터 기사자격을 부여받은 자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숙련을 획득한 기능공이 국가검정시험을 통하여 준기사 및 기사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다(『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5), p. 349).

<sup>25</sup> 일례로 해방 당시 흥남 비료공장에는 4명의 기술자, 황해 제철소에는 단 한 명의 기술자만이 존재했다고 한다(김중항,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 제7호 (1962), p. 14).

의학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청진외과대학을 창립하였으며, 1949년 2월에는 2년제 로어학교를 평양로어대학으로 개편하여 각 부문의 고급전문 인력 양성체제를 갖추었다. 이는 대학 설립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극히 부족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고등교육기관을 확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이후 통신교육기관과 공장대학 설립, 1980년대의 대학 증설 등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인력양성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시점마다 이러한 ‘현실적’ 방안이 활용되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을 증설하는 한편에서 중간급 기술자 양성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는 대학을 통해서 “비교적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일군들을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길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대량의 기술인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간급 기술자와 기능공 양성을 위해 3-4년제 중등전문학교를 두었다. 이 학교는 중학교 졸업자격을 갖춘 자가 입학하는 후기 중등교육 기관이었다. 1945년 11월 평양공업전문학교 창립 이래 1949년까지 총 55개의 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sup>26</sup> 그러나 중등교육 이수자들은 고급중학교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기술계 전문학교가 활성화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sup>27</sup>

이 시기 노동인력 양성이 광범하게 이루어졌던 곳은 각 생산현장에 부설된 학교였다. 1947년 4월부터 각 공장과 기업소에 직장기술전문학교와 직장기술학교가 설치되었다. 직장기술학교는 2년 만에 131개가 설립되어 12,600명을 교육하였고, 직장전문학교는 17개 학교가

---

<sup>26</sup> 위의 책, p. 202.

<sup>27</sup> 1974년 9월의 학제개혁으로 종전의 4년 내지 6년이었던 국민학교는 5년제 인민학교로 바뀌었고, 중등교육은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총 6년으로 연장되었다. 초급기술학교와 전문학교는 인문계 중등교육체제와 구분되는 중등기술교육체제에 속하였다.

설립되어 3,600명의 노동자를 교육하였다.<sup>28</sup>

직장부설 교육기관과 함께 야간 및 통신형태의 교육기관이 대학 병설로 설치되었다. 1948년 2월과 9월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야간학부 및 통신학부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곧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1948년에 3개 대학 20개 학급의 야간대학과 4개 대학 82개 학급의 통신대학이 설립되었다. 공장 부설 교육기관 설치와 대학의 야간 및 통신학부의 개설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의 토대를 갖추는 작업이었다. 야간, 통신, 공장부설 교육기관은 생산과 생산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건설 초기부터 계속 확장되어 갔다.

해방 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노동인력 양성과 개발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전쟁 중 노동인력 양성과 개발의 방침은 ‘교육의 지속’과 ‘핵심인력의 보전’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주요한 대학들이 신속히 지방으로 소개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전쟁 개시 후 곧 평안북도 구성군으로, 1952년 3월에는 다시 평안남도 순천군으로 옮겨졌다. 평양공업대학<sup>29</sup>이 평안북도 정주군으로, 원산농업대학이 자강도 장강군으로 옮겨진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이 전쟁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소개되었다. 전선에 파견되었던 대학생과 교수들은 1951년에 모두 소환되어, 9월 신학기에는 15개 대학과 55개 기술전문학교가 일제히 개교하였다.

전쟁 중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중요 공장과 기술자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sup>30</sup> 공장 및 인원 소개 정책은 1950년 9월 중순 이후 한국

<sup>28</sup>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pp. 349-350.

<sup>29</sup> 평양공업대학은 1952년 김책공업대학으로 학교명이 바뀐다.

<sup>30</sup> 이후 전쟁기간 중 공장 소개에 관한 내용은 차문석,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 생산 체제,” 『통일문제연구』, 제15권 1호(2003), pp. 87-99를 요약한 것임.

전쟁의 2단계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산업성은 10월 9일 소개를 위한 조직화를 시작하여 12명의 소개 지도요원을 단천, 흥남, 청진, 해주, 꾀이포, 남포, 강선 및 평안남도과 평양시에 파견하였다. 공장 및 소속 인원의 소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첫째, 소개작업은 각 지방기관, 당,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우선 기사장, 숙련 노동자, 동요 가능성이 있는 자를 먼저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노동자를 소개한다. 둘째, 공장의 가장 중요한 서류는 제1그룹과 함께 가지고 나오며, 다음으로 중요한 서류는 현장에 은닉하고, 중요하지 않은 서류는 소각한다. 셋째, 기초 설비, 원재료는 이동해서 보전한다. 이동 불가능한 설비는 파괴하고 적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서류, 설비, 원재료를 숨긴 지도간부와 노동자의 소개를 반드시 보장한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제3단계 국면이 형성되자 수복지역에서의 공장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졌다. 전쟁의 각 국면 속에서 진행되었던 공장 및 인원의 소개, 소개처에서의 즉각적인 조립과 연이은 공장 가동·생산은 향후 전후 복구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기간 중 과학기술자와 주요 공장의 노동자, 전쟁고아들을 소련, 중국, 헝가리, 루마니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 파견하여 기술훈련을 받게 하였다. 기능공, 기수, 기사로 양성된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부터 귀국하게 되는데,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때까지 최소 4백여명 정도의 기술인력이 귀국하였다.<sup>31</sup>

<sup>31</sup> 김선호, “북한의 대학교육 : 생애교육의 이론과 실제,” 『북한학보』, 제3집 (1979). K. P. Yang & C. B. Chee의 연구에 의하면 소련 등지에서 1955년 8월에 500명의 대학 졸업자와 6,000명의 기술자가 귀환하였고 1957년에 1,000명의 기술자를 포함한 1,263명이 귀환하여, 1957년까지 총 7,763명의 기술자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한다(K. P. Yang & C. B. Chee, “North Korean Educational System: 1945 to Present,” R. A. Scalapino (ed.), *North Korea*

## 2. 노동인력 양성 제도 정립기

전쟁의 발발과 그 뒤를 이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산업노동력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산업화 초기 공장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산업노동의 경험이 없었던 신규노동력으로 구성되었다. 전쟁 기간에 많은 노동자들이 전선으로 동원되었으며,<sup>32</sup> 종전 후 이들의 자리를 메운 사람들은 농민, 전쟁으로 파산한 도시 소상공인, 수공업자, 기업가, 제대군인들이었다.<sup>33</sup> 전후 복구와 산업화의 추진으로 이전보다 더욱 큰 기술인력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전쟁 후 공장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신규노동력으로 교체되면서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중공업부문 노동자들 가운데 10년 이상의 노동경력을 가진 자는 4%에 불과하며 50% 이상의 노동자들이 1년 미만의 노동경력을 가진 노동자들이었다.<sup>34</sup> 흥남비료공장의 경우를 보면 1956년 현재 해방 이전부터 근무하던 노동자의 비율은 11%, 전쟁 이전부터 근무하던 노동자 비율은 40%에 불과하였다.<sup>35</sup>

전쟁이 종료된 후 전후 복구와 산업화로 인하여 산업노동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공업 부문에서 노동력의 창출은 매우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쟁 후 복구 신설된 공장이 조업을 개시

---

*Today* (New York: Praeger, 1963)). 전후복구시기 해외 유학생 및 실습생 파견 현황에 대해서는 신효숙, “북한사회의 변화와 고등인력의 양성과 재편 (1945-1960),” 『현대북한연구』, 제8권 2호 (서울: 한울, 2005) 참조.

<sup>32</sup> 1949년 56만 5천명이었던 산업노동자 수는 1952년에 41만 8천명으로 감소되었다.

<sup>33</sup> 김일성, “당사업방법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359.

<sup>34</sup> 강영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진행된 전후복구건설 준비 단계의 로동계급의 투쟁,” 『력사과학논문집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 164.

<sup>35</sup> 리국순, “흥남 비료 공장 로동자들이 걸어 온 승리의 길,” 『력사논문집 4: 사회주의 건설편』 (평양: 과학원 력사연구소, 1960), p. 230.

한 5개년 계획기에는 산업노동인력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전후복구기와 5개년 계획기의 7년간 노동자수는 2.5배로 증가하였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3.4%였는데 비하여 산업노동자의 증가율은 14.2%였다. 복구기와 5개년 계획에 기사 및 기술인력은 8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술인력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1954년 이후 노동력 배치 문제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노동성이 노동력을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로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노동 계획을 통해 경제의 각 분야별로 소요될 노동자의 수를 결정하면 노동성이 배당하였다. 노동자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노동부로부터, 사무원은 인민위원회 사무부로부터 직장 배정을 받아서만 취업하도록 조치되었다. 때때로 노동성은 노동자를 대량으로 전출 또는 재배치하였다.<sup>36</sup>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노동행정기관이 노동력을 배치하는 방식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후복구 기간의 노동인력 양성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술원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북한에서는 전후복구 시기에 소련과 중국 등지에 산업실습생을 파견하였는데, 중국에만도 전후 두 차례에 걸쳐 6천여 명의 기능공을 파견하였다.<sup>37</sup> 1957년 말에 연구원 131명, 대학 2,181명, 전문학교 652명, 기능공양성기관 488명 등 총 6,147명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sup>38</sup> 1958년 6월에는 중국에서 6년만에 귀국한 기술자 5백여명이 평양방직공장에 배치되었고, 전쟁

<sup>36</sup>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1), p. 103.

<sup>37</sup> 리중옥, “로력 후비 양성 사업의 발전,” 『로동』, 제9호 (1958), p. 30.

<sup>38</sup>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p. 142.

고아 2천5백명이 중국의 공장과 농장에 일년간의 생산실습을 위하여 파견되었다.<sup>39</sup> 같은 해 7월에는 소련 유학을 마친 139명의 대학졸업생과 29명의 전문학교 졸업생이 귀환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sup>40</sup> 사회주의 국가와의 기술교류를 통해 양성된 기술자들은 자신이 습득한 생산기술을 기술교육을 통하여 공장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수하는 등 선진기술의 도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장의 복구와 신설이 마무리되면서 공장 건설을 위하여 파견되었던 외국 기술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5개년 계획기 들어서는 기술원조도 감소하여 기술인력 양성에 있어 사회주의 국가의 기술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감소하게 되었다. 더구나 1956년의 8월 종파사건 이후에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진행된 반종파투쟁의 영향으로 기술교육에서도 소련으로부터의 자립과 주체를 세울 것이 강조되었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전개되면서 외국의 기술원조에 의존하던 기술인력 양성 방식은 국내 교육기관과 산업 현장에서의 자체 기술인력 양성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기술교육의 내용 면에서도 외국의 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대신에 자체 실정에 맞도록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인력 양성 제도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 개발 제도를 조직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노동인력 및 기술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인력 양성 제도는 더욱 체계화되어 1960년대 초반에 이르면 노동인력 양성의 기본적인 제도가 완성되기에 이른다. 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는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인력 양성 제도는

<sup>39</sup>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p. 146.

<sup>40</sup> 『교원신문』, 1958년 6월 21일; 6월 28일; 7월 2일.

몇 가지 측면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첫째, 의무교육제의 확대와 종합기술교육의 전면적 적용, 둘째, 정시제 실업교육(part-time vocational education) 체계 구축, 셋째,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제도 정비, 넷째, 노동인력 개발과 정치적 동원의 결합이 그것이다.

### 가. 의무교육제 확대와 종합기술교육의 전면적 적용

한국전쟁 이전에 문해교육 및 기초교육 수준에서 확대되었던 교육 기회는 전쟁 후 의무교육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56년 8월에는 4년간의 초등의무교육제가, 1958년 11월에는 4년간의 초등교육과 3년간의 중등교육을 포함하는 7년제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다. 1966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67년 4월부터 중등의무교육 기간을 종전보다 2년 증가시킨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72년에 취학전교육, 초등 및 중등교육을 포함하는 11년간 무상의무교육제가 시작되었고 이는 1985년경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다. 의무교육 연한의 증가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산업화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질의 노동인력을 양성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었다.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동인력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 원칙인 종합기술교육을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교육과 생산노동,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이 보다 밀접하게 결합되었다.<sup>41</sup>

<sup>41</sup> 일반교육이란 “후대들이 장차 사회 생활과 활동에 참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준비를 갖추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어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의 교과교육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육·문화 교류를 통해 마카렌코류의 종합기술교육 이론과 제도, 교육방법을 도입하였다. 종합기술교육은 1950년대 후반에 학제 및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 소련에서 진행되었던 교육개혁과 마찬가지로 노동과 교육을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제도와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도입하였다. 1957년과 1958년에 교육성 부상을 포함한 교육관료들이 조선교육견학단을 조직하여 중국과 소련의 교육기관을 시찰하였다.<sup>42</sup> 이 시기 『교원신문』에는 소련과 중국,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 제도와 현황이 빈번히 소개되었고, 특히 생산기술 교육에 관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마카렌코가 체르친스키 공동체<sup>43</sup>에서 개발하였던 교육방법은 교육과 생산을 결합한 모범 사례로 선전되었다. 1958년 11월 소련의 교육개혁에 관한 테제는 한달

---

과 규범의 총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기술교육이란 “후대들에게 사회 실천적 활동, 특히 사회의 생산 활동의 어느 한 부문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시키며 그에 해당하는 기능과 숙련을 형성시키며 사회 실천적인 활동,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력과 체력을 발전시키며 직업적 준비를 갖추는 것”을 지칭한다(전성근,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는 새로운 형의 학교이다,” 『기술교육』, 제1호(1960)). 이는 졸업 후 특정한 직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 기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지식과 노동의 태도 및 규율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일반교육과 기술교육간의 긴밀한 연계는 북한에서 종합기술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sup>42</sup> “교육성 제2차 참의회 : 리 락언 부상의 소련 방문 조선 교육 견학단의 사업 총결 보고와 보통 교육국 송 정우 부국장의 중국 방문 조선 교육 견학단의 사업 총결 보고,” 『교원신문』, 1958년 2월 2일.

<sup>43</sup> 체르친스키 공동체는 우크라이나 지방에 설립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용소로 일종의 교육과 생활의 공동체이다. 마카렌코는 1927년 말에 이 기관의 책임자로 취임하여 자신의 교육 원칙에 따라 이 기관을 운영하였다. 1932년에 체르친스키 공동체는 3천명여명을 수용하였다. 이 공동체 생활의 기초는 생산노동이었다. 전체가 7~15명의 소집단으로 조직되어 하루 4시간씩 생산노동을 수행하였다. 모든 성원은 몇가지 분야의 숙련노동자로 훈련되었으며 중등학교 수준의 보통교육을 받았다.

후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근로자』를 통해 소개되었다.

소련보다 일년 늦은 시점인 1959년 10월에 이루어진 북한의 학제 개정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학제 개정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소련과는 다른 형태를 나타냈다. 소련에서 학제 개정으로 후기 중등교육기관이 일반계 학교인 3년제 기술학교와 실업계 학교인 기술전문학교, 야간·통신·계절학교로 운영되는 노동청년학교 및 농촌청년학교로 분화된 데 비하여, 북한의 후기중등교육기관은 계열이 구분되지 않고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라는 단일한 제도로 운영되었다.<sup>44</sup> 북한의 중등교육은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는 소련의 중등교육보다 생산노동과 기술에 대한 강조가 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해방 이후부터 유지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인문교육에 대한 선호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sup>45</sup>

북한의 종합기술교육은 세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첫째, 모든 일반교과교육과 기술교육을 결합하였다. 이는 수업주제를 생산 및 사회조직의 문제와 연결시켜 교육함을 의미한다. 협소한 직업기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산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적 기술과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연과학을 비롯한 학

---

<sup>44</sup> 소련의 학제 개정에 의하여 전기 중등교육 단계까지 8년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높은 중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주된 형태는 직장에 진출하여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서 야간 또는 통신제로 운영되는 노동청년학교나 농촌청년학교에서 후기 중등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둘째, 직업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중등직업기술학교에 진학하여 공장과 연계하여 특정한 산업 분야의 기술을 습득한다. 셋째, 중등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학교에 진학한다 (G. Bereday, W. Brickman & G. Read, *The Changing Soviet School*, (Cambridge: The Riverside Press, 1960) pp. 94-96).

<sup>45</sup>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기술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와 인문교육과 대항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도간의 타협의 산물로서의 1959년 학제개정에 관해서는 조정아,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 66-75 참조.

문적 지식의 습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종합기술교육 전담 교과를 설치하였다. 셋째, 노동을 직접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입하였다. 생산노동을 통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생산에 필요한 실제적 기술 기능을 훈련하고 생산 관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며 노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로 교양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았다. 1957년부터는 초급중학교에서 연간 30일, 고급중학교에서 40일간의 생산노동이 부과됨으로써 노동이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에서 종합기술교육이 가장 원칙적인 형태로 적용되었던 시기이다.

## 나. 정시제 실업교육 체계 구축

전쟁 이전 시기에 기업소 부설 교육이나 통신 교육 형태로 존재해 왔던 정시제 실업교육기관이 본격적인 산업화 시기에 들어서서 더욱 확대·강화되었다. 1960년 8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는 1970년까지 기술자와 전문가 수를 23만 명 수준에 이르게 할 과업을 제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 등의 정시제 실업교육기관을 공장부설로 설치하고 야간 및 통신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1960년 9월을 시작으로 1960년과 1961년에 “기술인재를 보다 많이, 좋게, 빠르게 양성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정시제 실업교육기관인 공장대학이 대거 설립되었다.<sup>46</sup> 전면적 공업화 단계인 7개년 계획을

<sup>46</sup> 북한에서 출판된 『조선교육사』와 이를 인용한 연구(이은영(1993), 신효숙(1997))에서는 최초의 공장대학이 한국전쟁중이던 1951년에 평안남도 성천군 군자리 65호 공장에서 김일성의 지시로 설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의 신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1970년에 발행된 신문에도 공장대학 설립 10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정규 대학 체제를 통한 인력 양성이 한계에 부딪치자, 각 공장과 기업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자들을 생산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공장과 지역에 필요한 기사 수준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공장대학이라는 형태를 신설한 것이다.

공장대학은 공장 내에 설치되어 해당 공장이나 인근 지역의 노동자들이 입학하여 직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공장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공장당위원회의 추천과 입학시험을 거쳐 입학하며, 졸업 시에는 일반 이공계 대학과 같이 기사자격증이 수여되었다. 교육기간은 신설 당시에는 4년이었다. 공장대학은 대부분 재학생수가 500명 내외의 작은 규모였으며, 공장의 직종과 동일한 학과가 설치되었다. 교사는 겸임교원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겸임교원은 주로 해당 공장에서 오랜 노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현장기술자들이 담당했다. 전임교원들도 대부분 그 공장에서 상당 기간 생산을 담당해 온 기사들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중앙에서 배치하기도 하였다. 공장대학이 여타의 직장 내 직업기술교육 제도와 구분되는 점은 일반대학과 같이 정규 학제에 포함되는 학력인정기관이라는 점이다.

공장대학은 1960년에 24개, 1961년에 13개가 설립되었다. 공장대학은 단기간에 급증하여 1963년에는 전체 96개 대학 중 36개가 공장대학으로 전체의 38%, 전체 대학생 21만4천명 중 공장대학생이 2만5천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게 되었으며,<sup>47</sup> 1966년에는 공장대학생 수가 전체 대학생의 절반 이상에 이르게 된다.<sup>48</sup> 이후에도 공장

---

주년이라고 명시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1950년 공장대학 설립설은 타당하지 않으며, 공장대학은 산업화의 산물로 1960년에 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sup>47</sup>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4).

<sup>48</sup> 강근조, 『조선교육사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 311.

대학은 경제계획의 종료 또는 시작 시점마다 대규모로 증설되었다.<sup>49</sup> 1970년에 이르면 공장대학이 설치된 주요 공장과 기업소의 기사 중 공장대학 졸업생이 40% 이상에 이를 정도가 되어, 공장대학은 개별 기업소의 기술인력 개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공장대학이 설립,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인력 양성 체계는 고등교육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규 학교교육 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의 두 흐름으로 구성되게 된다.

또한 1960년대 초에 야간대학과 통신대학이 더욱 증가하였다. 1961년 교육성의 고등교육부에 통신교육지도국을 설치하고, 일반교육부에 공장 및 통신교육국을 설치하여 통신교육기관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1962년말 50개 대학과 365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중등전문학교에 통신교육기관이 설치되어 13만 3천여 명이 교육을 받게 되었다.<sup>50</sup>

#### 다. 현장훈련제도 구축

1960년대 초반에 공장대학 이외에도, 학력과 기술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각종 기술교육을 생산과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생산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장단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공장 내 현장훈련의 제

<sup>49</sup> 공장대학은 1990년 현재 100여개에 달하며(『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1)), 이는 북한의 총 대학수 280여개(1992년 기준,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3))의 약 35%에 해당한다. 이중 약 1/3에 해당하는 37개 대학이 인민경제 제 1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고 7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과 1961년에 설립되었고, 1차 7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1970년에 4개, 제1차 6개년 계획이 종료된 후인 1976년에 11개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후에는 매년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80년대 내내 매년 수개의 공장대학이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sup>50</sup> 강근조, 『조선교육사 4』(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 314.

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1957년에는 공장의 인력양성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예비노동자의 직업훈련기관을 단일화하고 현직 노동자들의 직업훈련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양성훈련과 현직교육으로 이원화된 노동인력 개발의 제도적 틀을 형성하였다.

1960년 8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확대전원회의에서는 공장의 노동인력 양성 및 개발의 문제점으로 양성계획과 인력수요의 불일치, 생산현장의 요구와 교육 간의 괴리, 양성된 인력의 현직 부적용, 숙련노동자 재교육 부재, ‘직장기능전습체계’의 비체계성, 인력배치의 비체계성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야간 및 통신교육의 확대와 함께 직장 내 ‘기술기능전습체계’의 체계화,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제도’의 구축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공장의 노동인력 양성 제도는 단기적 노동력 공급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기능 수준 향상까지 고려하여 대상별로 세분화된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이 시기에 정비된 공장의 노동인력 양성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 무기능공을 생산 과정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기능공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기능전습체계’이다. 기능전습은 기능수준이 높은 숙련 노동자가 같은 작업반 내의 미숙련 노동자를 1-2명씩 담당하여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지도하는 것으로, 생산 현장의 경험이 없고 일정한 기능을 소유하지 못한 학교 졸업생, 제대 군인, 여성, 전직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능의 습득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주요 교육대상이 되었다. 기능전습을 통해서는 기술이론보다는 공구 사용법, 도면 독해법, 기계의 운전과 조작법 등 직무와 직접 연계되는 내용을 주로 교육하였고, 특히 선진적 노동자들이 개발한 작업방법 보급에 주력하였다. 기능전습은 일정한 형식이 없는 것이니 만큼 교육 수행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아 작업 평가시 교육 현황을

함께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직종별, 기능 수준별로 조직되는 기능전습반, 기술학습반과 같은 형태의 ‘직장기능학교’이다. 기능전습반은 현직 노동자의 기술 수준을 고급기능공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2년 과정의 교육제도로, 교육의 내용으로 직무관련 기술과 일반 과학지식 및 기초기술 이론을 교육하였다. 기술학습반은 기능전습반 수료자들을 기수, 기사급의 기술자로 양성하기 위한 3년 과정의 교육제도로, 직무 관련 고급 기술기능 및 그와 관련된 기술공학 이론을 주로 교육하였다.

교육 내용을 보면 미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기능전습반에서는 학습반을 생산공정과 일치된 형태로 조직하여 작업공정과 직결된 기능 훈련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단기기능전습반에서는 생산 공정과 표준 조작법에 대한 간단한 지식과 작업 수행에 필요한 조작 기능을 배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론교육의 비중은 기능전습반에서는 30%, 기술학습반에서는 50% 정도로 유지하도록 하였다.<sup>51</sup>

고급기능공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학습반에서는 직무기술 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 화학 등 공학의 기초가 되는 자연과학과 전기 공학, 펄프 공학, 제지 공학 등 직무 분야와 연결되는 전문 공학도 교육하였다. 이러한 기초이론교육은 이론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무기술을 이해하고 기술혁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강조되었다. 기술학습반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기도 하고, 공장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를 위한 ‘특별기술학습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sup>52</sup> 기능전습반과 기술학

<sup>51</sup> 정순도, “금속 공업 부문 기능공 양성에서 주되는 문제,” 『로동』, 제10호 (1959), p. 6.

<sup>52</sup> 『로동신문』 1960년 10월 21일; 8월 3일.

습반은 공장의 여건에 따라 10-40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셋째, 특정한 부문에서 단기적인 기능인력 수요가 발생할 때, 조직하는 기능공양성소이다. 이는 기업소 또는 경공업위원회 산하 총국에 설치하여, 초중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3-6개월간의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제도로, 학교와 직장의 연계체계에 해당한다. 현재는 교육기간이 6개월-1년 과정으로 연장되었다. 기능공양성소의 교육은 생산실습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이론 강의는 전 과정의 30%이내로 생산에 필수적인 내용, 예를 들어 기초공학과 도면 독해법 등에 한정되었다.<sup>53</sup>

기능공양성소를 거치지 않은 무기능공에 대해서는 단기기능전습반에서 개별적 기능전습과 집단적 교육을 병행하였다. 직종별로 10명 정도 단위로 견습공 브리гада<sup>54</sup>를 조직하거나 기능공을 반장으로 배속시켜 생산 공정과 표준 조작법에 대한 간단한 지식, 작업에 필요한 기본 조작법 등 연습과 생산 작업을 배합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집단적 교육은 공장이 신설 확장되었거나 신제품 생산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견습공 폰드<sup>55</sup>를 받았을 때, 제대군인, 중등학교 졸업생, 노동자의 부양가족 등의 신규노동력이 유입되었을 때, 선진 작업방법 보급시 주로 실시되었다.<sup>56</sup> 이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기술강습회가 조직되었다. 기술강습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도 기계 조작법과 작업방법이었다.

이러한 세분화된 제도를 통하여 노동자의 학력과 기술 수준에 따

<sup>53</sup> 정순도, “금속 공업 부문 기능공 양성에서 주되는 문제,” 『로동』, 제10호 (1959), p. 6.

<sup>54</sup> 작업반을 의미함.

<sup>55</sup> 폰드란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마련된 정원”을 의미한다.

<sup>56</sup> 정시원, “생산에서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경제지식』, 제11호 (1960), p. 12.

라 적절한 수준의 집단적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일상적 생산의 과정 속에서 기술 수준이 높은 노동자가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기능 향상을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였다. 형태상으로는 공장의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학력 및 기술 수준에 따라 교육자-학습자 고리로 연결되어 생산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된 것이다.

### 라. 노동인력 개발과 정치적 동원의 결합

산업화 시기에는 노동자의 학력 및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기술교육 제도를 통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인력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정치사상교육과 1950년대 후반부터 한층 확대되었던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생산력 제고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1959년 2월 강선제강소 제강직장의 진응원 작업반원들이 발기한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경쟁운동은 집단적 혁신운동의 형태로 장기화되었으며, 1960년 2월 김일성의 청산리 현지지도를 기점으로 하여 농업, 교육, 문화, 상업 등 사회 전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생산 증대를 위한 대중동원과 정치사상교육이 밀접하게 결합되었다.<sup>57</sup>

5개년계획기 들어 유희자재의 고갈과 원조의 급격한 감소, 산업 노동력 공급 원천이었던 농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생산 여건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조건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생산의 객관적 조건과 기술력을 개선하기보다는 노동자의 의지와 주체적 노력을 강조하는

<sup>57</sup> 이 시기 교육과 동원의 결합에 관해서는 조정아(2003), “산업화 시기 북한 공장의 노동규율 형성: 교육과 동원의 결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 참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당 지도부는 공장의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대중동원과 결합시킴으로써 하부 단위에서의 정치적 정통성 확보와 생산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정치적 헤게모니 장악과 생산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항일 유격대의 조직 규율을 노동의 과정에서 구현하여 생산과제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노동자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sup>58</sup>으로 여겨졌다.

‘정치도덕적 자극’이라 일컫는 노동자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은 노동 규율을 내면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규율 기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김일성의 노작과 교시, 당정책에 관한 집단적인 연구 발표회, 토론회, 독보회 등이 공장의 작업반 단위로 이루어졌다. 각종 교양 자료가 제시하는 내용은 생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정치적 동원과 결합된 공장 내의 교육은 북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본격적으로 노정되기 이전인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 시기에는 공장의 생산과 동원 조직, 이데올로기적 제도들을 통해 현시되고 행사되는 당의 지적·도덕적 지도력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가중되고 대외적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이후 생산성 제고의 수단으로서의 ‘정치도덕적 자극’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동시에 ‘정치도덕적 자극’에 대한 노동자

<sup>58</sup> 김일성, “경공업부문에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 사업을 개선하며 제품의 질을 높일 데 대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229.

들의 피로도도 점차 증가되어갔다.

### 3. 사상교육 전면화 시기

1960년대까지의 초기 산업화 시기 노동인력 개발의 중점이 ‘紅’, 즉 사상의식보다 ‘專’, 즉 기술과 전문성의 향상에 두어졌다면,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노동인력 개발의 강조점은 사상의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이러한 변화는 1967년에 소위 ‘갑산파 사건’이라고 불리는 북한 역사상 최대의 내부 정치투쟁을 경유하면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계가 강화되고, 1970년의 제5차 당대회 및 1974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 임명을 통하여 김정일이 정치적 후계자로 등장하게 되는 정치적 변화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1967년 북한사회에서는 정치·사회·문화의 각 부문에서 격변이 일어났다. 이 격변의 성격은 정치적으로는 상당수의 당 고위간부에 대한 숙청과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개인 숭배의 전면화였다.<sup>59</sup> 정치적 숙청은 1967년 5월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숙청대상은 주로 사상문화 분야에 포진되어 있던 ‘갑산파’라고 불리는 국내계 정치세력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숙청은 사회 전 부문에서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로 이어졌으며, 학교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다. 1967년 이후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유학중이던 유학생들도 외교관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대거 철수시켰다.

<sup>59</sup>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64.

1970년 11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북한 지도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기술혁명의 본격적인 전개와 전체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1970년대의 과제로 내세웠다. 1972년 10월 제5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김정일은 이듬해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선전담당 비서로 선임되었으며, 1974년 2월의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인되어 당 내 실권을 장악해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에 따른 국가기구의 강화와 김일성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의 확립과 맥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교육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통하여 유일 지도체계를 확립하는 주요한 도구로 위치지어졌다.

1968년 3월 14일에 발표한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라는 연설문에서 김일성은 교육 부문에 사대주의, 자본주의 사상, 봉건주의 사상과 같은 나쁜 사상 독소가 있으며, 이것은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계급선이 분명하지 못한 ‘범범교육’의 결과라고 지적하였다.<sup>60</sup> 또한 일부 교육일군들이 어린이들에게는 혁명사상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연주의적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을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교육사업의 기본 방침이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재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교육 부문의 과제로 교원들을 혁명화하는 것과 함께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산 정치활동가, 산 인테리”로 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부터 1970년대 말까지 사상성은 교육과 노동인력 개발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sup>60</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pp. 308-309.

한편 조선노동당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제1차 6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차 6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강화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를 힘드는 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규정되었다. 공업 부문에서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업노동자와 공업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줄이며,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완화하는 3대 기술혁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근로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을 계획의 기본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대외무역정책의 기초로서 자력갱생 원칙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고수해왔다. 1970년대 초반의 오일쇼크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규모의 오일 달러가 유입되었다. 북한에서도 서구와의 무역은 1972년에 급격히 확대되어 1974년에는 최고에 달하였다.<sup>61</sup> 해외로부터 도입된 자본과 기술 덕분에 6개년 계획목표는 10% 이상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예정되었던 계획기간보다 1년 반 앞당겨 성취되었다.<sup>62</sup> 그러나 이 계획기간을 경유하면서 북한에서는 외채가 건잡을 수 없이 누적되어 1970년대 후반에는 대외채무 불이행사태가 발생하였고, 경제 침체 메커니즘이 장기화되기에 이른다.

경제적 침체와 자립경제 노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자립화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이 교육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

<sup>61</sup> 양문수, “북한경제의 발전과 낙후 및 희생모색기: 1971-2002,” 『북한 60년의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0), p. 67.

<sup>62</sup> 양문수에 따르면 이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추정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북한의 공식통계를 통한 추정치는 17.2%-19.7% 정도이며, USCIA의 추정치는 10.4% 정도이다.

된다.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노동력 구성에서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를 나온 기사, 기수 및 전문가 비율이 10% 이상에 이르도록 하고, 6개년 계획 기간 동안 52만 3천명의 기술자, 전문가를 양성하여 6개년 계획 종료 후 기술자와 전문가의 수를 총 100만명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기계공학, 자동화공학, 전자공학 분야에서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은 사상성의 벽에 가로막혀 고급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를 거치는 시기에 새로운 정치사상 교과목이 편성되고 그 시간 비중도 대폭 증가하였다. 1963년 8월에 보통교육성령을 통해 개설되었던 ‘공산주의도덕’ 교과는 교과서 편찬 및 부분적 운영을 거쳐 1968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일제히 수업이 시작되었다. 정치사상교과는 이후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sup>63</sup> 대학에서는 1975년에 ‘김일성동지 로작’,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조선로동당정책사’ 과목이 신설되었다.

1960년대 초반의 정치사상교육에서는 집단주의,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공동재산 절약, 사회주의 우월성 인식<sup>64</sup> 등이 주요 교육내용이

<sup>63</sup> 현재 1970년대 북한의 중등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나 기초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이들 교과가 정확하게 언제 개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983년 과정안에 이들 교과가 편성되어 있고 대학에서 1975년에 유사 과목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1970년대 중반에 이러한 정치사상 교과가 대폭 신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sup>64</sup> 김일성,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전국교육일군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61년 4월 25일),”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김일성,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4차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62년 10월 16일),” 『김일성저작선집3』(평

되었으며, 특히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산주의적 로동의 태도’가 강조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정치사상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교양’의 내용으로 대두되었다. 1970년 12월의 5차 당대회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것이 언급된 이후에 혁명전통에 대한 사상교육은 더욱 강화되었다. 혁명전통과 함께 집단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가 정치사상교육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sup>65</sup>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의 방향과 원칙은 1977년 9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었다.

정치사상교육이 중심이 되었던 이 시기 교육의 특징은 1970년대에 중등교육을 받았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5년제 중학교<sup>66</sup> 시절에는 기술생산에 필요한 그런 기술교육 같은 것은 전혀 받지 않았다. 5년 동안 실습도 안 나갔다. 실습이라는 게 교과서 한 과목에 생산기본이라는 거 하나 있는데, 실습을 4-5학년 동안 드문 드문 한다. 생산현장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적인 것을 파악시키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건 직업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6학년으로 개편된 후에는 더하다.<sup>67</sup>

아무리 공부 못해도 아버지가 간부고 그러면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했던 적이 60년대 말부터 70년대. 70년대가 계급투쟁이 제일 심각했거든요. 내가 공부할 때가, 60년대 후반에 되게 신

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참조.

<sup>65</sup> 집필위원회, 『교육학(사범대학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9), pp. 288-338.

<sup>66</sup> 1967년 학제개정으로 중등교육기관은 5년제 중학교로, 1973년 학제 개정으로 6년제 고등중학교로 변경되었다.

<sup>67</sup> K1, 함경남도 연합기업소 노동자(1979-1998),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5월).

분타령 했어요. … 밤에는 질통을 지는 거예요. 인텔리들이 살라면 노동계급화되어야 된다고.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노동계급화되지 못한 대학생은 쓰지 못한다고.”<sup>68</sup>

즉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에 이르는 시기에는 산업화 초기에 강조되었던 기술교육의 비중이 축소되고 정치사상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대학교육조차도 전문성보다 계급성과 사상의식이 강조되었다.

#### 4. 노동인력 양성 제도 분화 시기

198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확립된 시기이며, 경제적으로는 침체가 가중되면서 부분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출로를 모색한 시기이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은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였다. 김정일은 당내 3대 권력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당 지도부도 항일혁명 2세대와 전문 지식을 갖춘 실무형 지도자로 대거 교체되었다. 교육부문에서도 김정일의 영향력이 가시화되면서 1984년경에 이르러 이전 시기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침체를 탈피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과 기술인력의 양성이 강조되면서 노동인력 양성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시도되는 시기가 1980년대이다.

1978년부터 시작된 제2차 7개년 계획의 기본 과제는 “인민경제의

---

<sup>68</sup> HI, 황해남도 고등중학교 교사(1970-1980),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6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과학화의 실천 방안으로 과학연구기관 강화, 과학자·기술자 질적 향상, 대중적 기술혁신, 외국 선진과학기술 성과 도입 등이 고려되었다. 경제의 현대화에 있어서 특히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 등의 분야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들에서 최신과학기술부문과 연관된 학과를 신설하고 기계공학, 전자공학, 농업생물학, 식료공학 등의 기술자 양성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7개년 계획의 일부분으로 발표되었다.<sup>69</sup>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를 통하여 ‘19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가 발표되었다. 이는 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천, 수산물, 알곡, 간척지 개간이라는 10대 분야에서 10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총력을 다해 완수함으로써 경제 침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를 담당할 유능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제6차 당대회에서는 인민경제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부문을 적극 발전시키고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 중반까지 축소되었던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과 기술 교류의 활성화와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해외 유학생 파견도 활성화

<sup>69</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 1977).

화되어 1980년도부터 1984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소련 545명, 일본 498명, 중국 287명, 동독 97명, 서독 87명 등 총 1,868명의 유학생이 파견되었다.

중등교육에서는 정치사상교육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나갔다. 6차 당대회에서는 또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최신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기술교육 강화와 함께 현장기술자를 양성하는 단과대학이 집중적으로 증설되었다. 1980년대 북한 교육의 특징은 과학기술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의 강화, ‘수재교육’ 강화,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이원화로 요약할 수 있다.

### 가. 과학기술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

1970년대 후반기 들어 과학기술 교육, 특히 수학과 물리학 등의 기초과학과 기초기술 교육, 영어, 노어 등의 외국어 교육이 강조되었다. 한편으로는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sup>70</sup> 경제의 현대화를 진행하자는 주체적 입장이 강조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와 과학연구기관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기술교류 및 기술서적 번역을 통하여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고 확산시킬 것이 강조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국의 고등중학교와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학과경연, 수학경연, 물리경연대회, 용접경

---

<sup>70</sup>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80년,” 『김일성저작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53.

기대회가 신설되었다. 대학의 공과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에 70% 이상의 학생들을 배치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sup>71</sup> 대학에서는 학과와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부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84년에는 대학 교원과 연구사들을 기업소와 설계 기관에 파견하여 230여개 학과의 기술자 양성 기준을 결정하고, 대학의 학과를 그에 따라 조정하고, 600여개의 과정을 개편하였다.<sup>72</sup> 1985년에 신설된 기계, 전자, 자동화 부문의 단과대학에 전자계산기학과, 프로그래밍학과, 정보처리학과, 집적회로학과 등의 학과를 설치하였다. 1987년과 1988년에도 대학에 30여개 학과, 백여개의 전공반을 신설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IT산업 개발 정책에 따라 이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1985년에 조선계산기 단과대학이 평양과 함흥에 설립되었다.

외국어교육이 강화된 것은 대외교류의 활성화 및 과학기술의 강조와 관련된다. 김일성은 1978년 전국교육일군대회 연설에서 “외국어를 알아야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서적들을 마음대로 읽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진과학기술을 배울수 있다”고 하면서 대학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대학생들이 영어, 프랑스어, 로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중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익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sup>73</sup> 또한 1980년에는 교육부문 책임일군협의회 연설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고 대외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또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영어, 노어,

<sup>71</sup>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6), p. 338.

<sup>72</sup> 리영환, 『조선교육사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 89.

<sup>73</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일성저작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64.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기본으로 하면서 힌두어, 아랍어도 가르쳐서 농업대학과 수산대학, 건설건재대학 학생들을 외국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고등중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서 외국어 과목 낙제생들은 일년씩 더 교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sup>74</sup>

1981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외국어교육의 본보기단 위학교를 5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1985년부터 인민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외국어자모와 생활용어를 교육하였고, 고등중학교에서는 외국어 수업시수를 증가시키고 회화교육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읽고 번역하는 기존의 ‘문법번역식’ 교육 대신 회화 위주의 수업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sup>75</sup> 이러한 외국어교육의 강화는 1980년대의 점진적인 대외교류의 확대 및 과학기술 강화 정책과 연관되는 것이었다.

## 나. 영재교육 강화

1980년대 북한 교육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수재교육’이라 일컬어지는 영재교육기관의 신설과 운영이다. 1984년 9월에 북한 최초의 영재교육기관으로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신설되었다. 이전 시기에는 영재교육을 사회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평등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시기에 중등교육 수준에서 일반 영재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은 북한 교육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력양성의 기술적 측면보다 사상적 측면이 강조되었던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재론은 “교육을 받는 사람을 천성적으로 월등한

<sup>74</sup> 김일성, “외국어교육을 더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참조.

<sup>75</sup> 『교원신문』, 1987년 11월 12일.

자와 열등한자로 갈라놓음으로써 본질에서 근로인민의 자녀들의 열등성을 론거짓고 합리화하며 교육의 차별을 기초지으려는 반동적 견해”<sup>76</sup>라는 비판을 받았다. 1968년에 김일성은 김책공업대학에서의 연설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일부 사람들은 천재가 되려면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학을 마치면 인차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 이론에 찬성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중학을 나오고 인차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일부 기술과목을 공부하는데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학생들이 사회적단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혁명화 하는데서는 그만큼 더디며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 다시 혁명화하지 않으면 안될 절름발이인테리를 길러낼수밖에 없습니다. … 중학교를 나온 다음 사회에 몇해동안 내보내는 것으로 하여 생기는 이른바 손실보다 사회적단련을 통하여 얻는 리득은 몇배나 더 큰 것입니다.<sup>77</sup>

김일성이 “넓은 사상 관점”이라고 비판하였던 ‘수재론’은 1984년에 당의 교육 방침으로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1984년 4월에 연설을 통하여 20대에 준박사, 박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학자들이 대체로 나이가 든 다음에 학위문문을 쓰다보니 전공분야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창발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으면 뇌수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창발적 사고능력이 약하고 기억력도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sup>78</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영재를 양성하기 위해

<sup>76</sup>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87-88.

<sup>77</sup>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pp. 230-231.

<sup>78</sup> 김정일,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잘 꾸릴데 대하여,” 『과학교육사업

서 1984년에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춘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신설한 것이다.

이 연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중등교육 수준에서 평등주의적 교육관에 어긋나는 엘리트 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은 이전 시기의 자립적인 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이 누적된 결과였다. 1988년 과학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김정일은 북한이 이전 15년간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잘 하지 못했다는 점을 실토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의 현장 경험을 쌓은 후 과학원에 들어온 젊은 연구사들을 외국에 유학시켜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즉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존의 정치사상교육 중심의 평등지향적인 교육이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기 엘리트 교육의 실시와 외국과의 과학기술교류 활성화 방침을 채택한 것이다.

1984년에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신설한 후, 1985년에는 각 도소재지에 총 12개의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들은 일반 중학교보다 우수한 교육 시설과 교사진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졸업생들은 졸업 후 군대나 사회생활 경험 없이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이 된다. 이러한 영재 교육 방침은 현재에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1990년대의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을 발전시킬데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9), p. 77.

## 다.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분화

이 시기에는 중등교육 수준에서 영재교육기관이 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분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중등의무교육 체계가 완성된 후 ‘온 사회의 인테리화’라는 구호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1년제 의무교육제 실시 및 성인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력을 소유하게 되자, 고등교육 수준에서 교육기회의 확대가 정책적 목표로 대두된 것이다.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의 과업의 하나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천명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민족 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을 늘이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10여개의 대학을 ‘중심대학’으로 지정하고 ‘수재교육’ 차원에서 중심대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한편, 특정한 산업 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단과대학이나 정시제로 운영되는 공장대학을 증설하고, ‘텔레비존 방송대학’을 신설하는 등 통신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학은 1960년에 78개, 1970년에 129개, 1980년에 170개, 1980년대 말에 260여개, 1992년에 280여개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단기간 내에 고등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대학을 신설하기보다는 지방 산업 운영에 필요한 현장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단과대학을 증설하고 고등전문학교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김정일은 1984년 4월에 고등전문학교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4년에 20여개의 고등전문학교를 단과대학으

로 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고등전문학교들을 점차적으로 3-4년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되, 산업적 수요와 학교의 지역적 배치, 교육조건에 따라 4-5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단과대학은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한 현장기사를 키워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이론교육과 함께 기술실습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육강령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1984년에 금속부문 3개, 지질탐사부문 1개, 전기부문 2개, 기계, 자동차부문 3개, 전자, 자동화 부문 3개, 화학부문 2개, 건설건설부문 1개, 립업부문 1개, 경공업부문 2개, 수산부문 1개, 농업부문 3개, 인쇄부문 1개, 보건부문 1개, 모두 24개의 4년제 단과대학이 신설되었다. 1985년에 16개, 1987년에는 6개의 단과대학이 신설되었으며, 1988년부터는 개편되지 않은 모든 고등전문학교들이 주로 전자, 자동화 공업부문, 금속, 기계 공업부문, 간석지부문, 봉사부문 등의 4년제 단과대학이나 2년제 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1984년에는 기수급 중등기술인력을 양성하는 1-1.5년제 전문학교를 신설하였다.

이 시기에 또한 텔레비전을 이용한 방송강의를 시작하였다. 1962년에 설립된 맑스레닌주의방송대학을 1973년에 김일성방송대학으로 개명하였다. 김일성방송대학은 1년제 통신대학으로 김일성 혁명 역사, 김일성 노작 연구, 김일성 혁명 전통, 노동당 정책사, 정치경제학, 철학 등의 정치사상교과를 교육하고 있다.<sup>79</sup>

이와는 달리 주로 수학, 물리학, 외국어 등의 순수 학문 분야를 다루는 ‘텔레비존방송대학’이 1982년 9월 1일에 개교하였다. ‘텔레비존

<sup>79</sup> 최근 북한은 김일성방송대학 제42기 졸업식을 진행하면서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 역사와 노작 등 총 1,253회의 방송강의를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의 현대화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683호, p. 13.

방송대학'은 학부를 김일성종합대학에 두고 대학의 통신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대 학생들이 있는 전국의 기업소와 협동농장에 5-20명으로 구성된 학습반을 조직하고, 매주 3회 90분간씩 텔레비전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1985년에 37개 교 대학에서 700여개의 수업시청장을 설치하였다고 한다.<sup>80</sup>

요컨대 1980년대에는 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핵심 인재를 개발하는 한편, 단과대학과 전문대학, 정시제 실업교육기관을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방 산업에 필요한 노동인력 양성과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 5. 교육의 총체적 위기와 IT수재 양성을 통한 극복 모색기

### 가. 교육 및 인력개발의 총체적 위기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으로 이른바 '김정일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종석에 의하면 '김정일시대'는 정치사회적으로 유일체제의 완성기이며,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세대가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이며, 북한 체제의 심화된 위기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시기이다.<sup>81</sup>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김일성의 사망, 식량난으로 폭발된 경제적 모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 북한은 공식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최근년간 조선의 형편은 50년대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로 되었던 전후 시기보

<sup>80</sup>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6), pp. 221-223.

<sup>81</sup>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86-87.

다 더 어려웠다”고 보도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sup>82</sup>

총체적인 위기는 교육 부문에도 즉각 반영되어 교육 인프라 파괴, 출석률 저하, 수업 질 하락, 교권 하락 등의 문제를 파생시켰다. 1995년의 대흥수로 4,210개소의 유치원과, 전체 초중등학교의 1/4에 달하는 규모인 2,290개소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건물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으며, 3천 톤에 달하는 34만6천여 권의 교과서가 휩쓸려 내려갔다고 한다.<sup>83</sup>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 이후 학교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식량난으로 인해서 학생과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등교와 출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제난 이후 학생들의 출석률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에 의하면 경제난이 가장 심각했던 90년대 중반 경에는 일반적으로 출석률이 70%를 넘지 못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출석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북한의 중학교 교사였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당시의 교실 수업 풍경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학생들이 전부 다 없어져있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일어서!” 하고서 다리운동 시킨단 말입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도 한 5분 지나면 다 쓰러진단 말입니다. 우리부터도 걸상 놓고 앉게 되면 다 쓰러져 있는데, 교사 1층부터 3층까지 학교를 도는 게 벌벌 기어 올라옵니다.<sup>84</sup>

최근에 출석률은 거의 복구되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결석자가 학급

---

<sup>82</sup> 조선중앙통신, 1999년 12월 24일.

<sup>83</sup>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DPRK* (2003).

<sup>84</sup> J1, 함경북도 고등중학교 교원(1991-1997),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6월).

당 2-3명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결석률이 높기 때문에, 지역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sup>85</sup>

경제난 시기에는 교사들의 출근을 역시 감소하였다. 교사들에 대한 식량 배급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편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이 되자 그것도 중단되었다. 조직생활을 통해 교사들의 학교 이탈과 규율 이완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배급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생계를 위한 교사들의 학교 이탈을 막기 어려워졌다. 교사들의 근무규율 이완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자 공식적으로는 교사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을 몇 개조로 나누어 한두 주일씩 식량을 구하라고 휴가를 보내고 남은 교사들이 수업을 맡는 미봉책을 사용하여 수업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나갔다.<sup>86</sup>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도 경제난을 계기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sup>87</sup> 생산노동 분야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교사들은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내다 팔 수 있는 어떠한 물건도 확보할 수 없었다. 배급이 중지된 상태에서 교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

---

<sup>85</sup> 일례로 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친척이 거주하였던 함경북도 산간 지역의 교육 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한 절반 정도가 학교를 거의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졸업증을 주고 배치는 군수공장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가려면 십리를 걸어가야 하는데, 겨울만 되면 아이들을 잡아떼서 학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농촌의 리나 산골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거의 안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전에는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 그 이전에야 산골에 아이들 세 명이 있어도 분교를 세워놓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소외된거죠.”(H2, 함경북도 대학 교원 (1979-2002), 조정아 면담(2005년 11월)).

<sup>86</sup> 김희영·한만길 엮음, “끓임없는 업무, 배고픈 교원생활,”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서울: 우리교육, 1999), p. 183.

<sup>87</sup> 조정아, “‘직업적 혁명가’와 ‘동요하는 인테리’ 사이에서: 북한의 교사상과 교원의 사회적 지위,” 『현대북한연구』, 7권 2호(서울: 한울, 2004).

법은 별도의 장사 수단을 확보하든지 학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교사를 학생들이 찾으러 다니기도 하였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청년동맹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거나 운동장을 갈아서 밭을 만들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교사가 장마당에 나와 집에서 만든 빵이나 술 등을 파는 것을 보고 “선생도 별 볼 게 못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sup>88</sup> 여유있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식량난이 고조되면서는 고급 담배나 술 등을 받고 학생들의 낙제를 면하게 해주는 ‘암거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식량난 당시 교사들의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집에서 노는 부양들은 산에 가서 열매를 뜯어오던가, 산나물을 뜯어오던가, 뭇 풀을 뜯던가 대응해서 반찬이라도 배불리 먹는데, 교원들은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니깐 교원들은 사표를 내요. 그러면 사표수리가 또 안 되요. 교원 해임을 안 시켜주는거예요. 그래서 식량위기가 오니가 당적으로 교대제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출장증명서를 다 떼줬어요. 교장선생님께 “부모님집 가서 식량을 구입해오겠습니다” 하면서 출장증명서를 일주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내 수업을 다른 선생님이 대신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조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96년도 97년도, 이때에는 교사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일주일씩 이렇게 시간을 줬어요. 한 학교에 교직원이 30명이다 하면 3-4명 한조씩 해서 시간 받고 갔어요.<sup>89</sup>

한편, 경제난 이후 공장의 기술인력 개발 체계의 실패는 학교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경제난 이후 지방공장은 대부분 공장 가동 자체가

<sup>88</sup> J2, 함흥시 고등중학교 졸업(1991-1996), 조정아 면담(2003년 11월).

<sup>89</sup> C1, 함경북도 인민학교 교사(1984-1996), 조정아 면담(2005년 5월).

어려우며, 연합기업소나 규모가 큰 중앙기업소의 경우에도 가동율이 저조하다. 현재 북한의 공장 가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이 다니던 공장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으며, 큰 공장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만 가동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책제철소의 용광로 3기 중 1기만이 가동 중이며, 청진제강소는 가동되지 않아 기계가 파철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sup>90</sup>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공장이 “미제가 전쟁을 일으킨 때보다도 더 속속들이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하여 건설이나 이동과 같은 사회적 노동에 동원되거나, 공장에는 출근확인만 하고 실지로는 장사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공장의 노동규율도 급속도로 이완되어 출근율과 교육 참가율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공장 자재나 기계 부품에 대한 절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의 평균 생산지수는 1989년을 100으로 볼 때 1998년에는 52.5로 약 47.5% 감소되었다고 한다.<sup>91</sup> 경제난 이후 공장의 복구와 가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인력 개발이나 재교육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나. 정치사상교육과정 개편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4년 9월 교육성 보통교육부는 인민교육지

<sup>90</sup> H2의 증언에 의하면 1995년까지는 장마당에 김책제철소에서 8·3제품으로 생산한 가마, 절구 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제철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시장에 새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sup>91</sup> 최중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인당 평균생산지수는 실질 GNP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기준년도 대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에 “새학년도 교육강령집행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 글에서 1994년도 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모든 교수 교양사업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사상리론에 기초하여 조직진행하며 교수교양의 전과정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사상 이론의 정당성과 독창성, 영도의 위대성 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두어졌던 정치사상교육의 목표는 동일한 내용을 김정일에게 그대로 계승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모든 학생들을 김정일에게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되고 절대적인 숭배심을 가지게 하며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 방향에 따라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효성 교육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의 유훈을 새기고 역경 속에서도 김정일을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충신’, ‘효자’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최대 과제로 제시되었다.

1998년말부터 1999년 4월에 걸쳐 인민학교 교육과정에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어머니 어린시절’ 과목이, 고등중학교 과정에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니 혁명력사’ 과목이 도입되었다.

## 다. 과학기술교육 및 IT분야 영재교육 강화

1997년 1월 조선노동당 총비서 취임으로 시작된 김정일의 권력승계작업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통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이 재추대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권력승계작업이 완성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선군정치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육이, 한편으로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첨단과

학기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하였으며, 2000년 신년사설에서는 과학기술을 사상, 총대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규정했다. 2000년 7월 4일자 노동신문 논설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곧 혁명에 대한 태도,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이며 “과학기술 발전이 담보하면 혁명도 주눅이 들고 사회주의도 빛은 잃게” 된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강조하였다. 이는 김정일 집권 체제 구축기에 주로 선군정치사상을 통하여 군사와 사상적 단결을 강조하였던 것과 비교되는 언술이다. 이는 김정일 집권 체제 구축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적 활로를 모색함으로써만이 장기적인 정권의 안정과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부터 ‘실력본위’의 교육이 강조되고 20대, 30대 박사 양성론이 다시 대두되는 등 ‘인재중시방침’이 교육정책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실력을 위주로 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할 수 없고,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쪽정이”를 양성할 뿐이라는 것이다.<sup>92</sup> 따라서 20대, 30대 박사를 양성함으로써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강성대국 건설의 지름길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북한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영재교육, 특히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영재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영재교육 중시 방침은 199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도 명시되었다. 1977년에 발표되었던 ‘사회주의

<sup>92</sup> “교육을 실력본위로 하는것은 혁명인재육성의 근본방도,” 『교육신문』, 2005년 2월 10일.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영재교육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199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서는 제1장 교육법의 기본의 제6조에서 “수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수재교육체계를 바로 세워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김정일은 1995년 7월에 제1중학교 졸업생은 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몇 개 중앙대학에만 진학하기 때문에, 부문별 주요 대학에 능력있는 학생들이 진학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제1중학교를 증설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9월 1일부터 평양모란봉제1중학교가 평양시 단위의 영재학교로 전환되고, 1996년 4월 1일에 평안남도 순천제1중학교, 평안북도 압록강제1중학교, 함경남도 성천강제1중학교, 함경북도 고말산제1중학교 등이 신설되어 제1중학교 수는 총 26개교에 이르게 된다. 이어 1998년에는 제1중학교를 전국의 모든 시, 군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1999년 3월에는 전국 시·군·구역마다 제1중학교를 1개교씩 추가 신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93</sup> 현재 제1중학교는 전국의 시·군·구역을 통틀어 200여개가 설립되어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전국적인 영재만을 선별하여 교육하는 제1중학교 제도 도입 때와는 달리, 평양제1중학교→도제1중학교→시·군·구역 제1중학교의 3단계로 다층화된 선발체계를 구성하여 중등학교 학생들을 능력별로 세분화하여 선발하고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재교육의 강화 및 세분화된 능력별 교육 체계는 해방 후 북한 인력개발 체계가 일관되게 지향해왔던 평등주의적 교

<sup>93</sup> 교원신문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대학교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령도(1),” 『교원선전수첩 1』 (평양: 교원신문사, 2003), pp. 17-18.

육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또한 수월성보다는 사회적 평등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지향점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영재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영재교육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을 ‘재능있는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천부적 재능을 절대적으로 보는데 비해서, 사회주의 교육에서는 ‘나라의 재부’인 ‘수재’들을 조기 발견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모든 부문에서 모든 사람의 재능을 최대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sup>94</sup> 또한 교사들이 “원래부터 수재가 따로 있다고 보면서 수재와 둔재를 갈라 놓고 그것을 절대화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현실적인 목표와 교육의 평등 추구라는 사회주의 교육 원칙 및 정당화 기제 간의 균형을 취하려는 줄타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제1중학교의 광범위한 증설은 실제로는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 평양제1고등중학교와 도제1고등중학교 설립시에만해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영재교육에 대하여 “수재들은 한 명이 천 명을 먹여살리는 국가적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였다고 한다.<sup>95</sup> 그러나 제1중학교가 군과 구역 단위로 확산되면서 제1중학교가 아닌 일반중학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

<sup>94</sup> 『교원신문』, “우리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교육사업에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2002년 5월 16일.

<sup>95</sup> C2, 고등중학교 교사, 조정아 면담(2003년).

반 중학교에서는 대학진학시험 기회가 축소되어 대학 진학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만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자녀를 제1중학교에 진학시킨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데에서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구역 1중학교가 생겨나니까, 어중이떠중이가 몰리니까, 그때부터 여론이 나빠지고. ... 1중학교라는 것이 도에 하나 있을 때에는 수재교육이라는 것의 명분이 있었는데, 구역에 하나 있으니까 무슨 수재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제 교육의 차별을 두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공부 좀 하고 괜찮게 사는 애들은 1중학교로 가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남고. 선생님들도 자부심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1중학교에 못 갔다고 공부를 포기해 버리니까 가르쳐 줄만한 것도 없다고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무슨 교육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두냐? 무슨 구역1중학이 수재냐?<sup>96</sup>

군·구역제1중학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최근에는 일부 군·구역제1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거나 소학교 졸업 후 선발시험을 거쳐 군·구역제1중학교에 입학하는 제도를 없애고 중학교 3학년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시험을 치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영재교육은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 부문에서 특히 활성화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조기 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조치에 대하여 컴퓨터 조기교육을 통해 젊고 유능한 프로그램 전문가를 육성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는 조치로 21세기에 상응한 경제력을 다져 나가기

<sup>96</sup> H2, 함경북도 대학 교원(1979-2001), 조정아 면담(2005년 11월).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설명하고 있다.<sup>97</sup>

정보통신분야의 교육은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고등중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은 1990년대 초반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98년에 정규 교과로 편입되어 중학교 2학년 이상에게 주 2시간씩 교육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이전 단계에서는 컴퓨터에 관련된 간단한 개념과 기본 작동법, 키보드 연습 등을 다루고 고학년에서는 컴퓨터 운영 체제와 각종 사무용 프로그램 및 인터넷 활용 방법, 기초 프로그램 작성법을 교육한다.<sup>98</sup> 제1고등중학교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6학년 정규 과정으로 컴퓨터 수업이 운영되어 자판 연습과 프로그램 작성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규 교과 이외에도 각 학교에서 최고의 인재로 ‘컴퓨터 소조’를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다. 1997년부터는 ‘전국 고등중학교 학생 프로그래밍 경연’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에는 내각 교육성 산하에 ‘프로그램교육지도국’을 신설하고 ‘프로그램교육센터’, ‘컴퓨터교육센터’를 두어 IT인재양성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2001년 1월 28일 김정일은 ‘컴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교시를 통해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학원, 금성제1중학교, 금성제2고등중학교를 전문컴퓨터수재양성기지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제1중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중학생 중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수학경연, 컴퓨터경연 등을 통해 선발하여 금성학원, 금성제1중학교 수재반을 구성하고, ‘피라미드식’으로 공부를 시키면서 실력을 평가하여 기준 미만인 학생들은 탈락시키고 우수한 학생들을 새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컴퓨터수재반

---

<sup>97</sup> 『교원신문』, 2001년 2월 1일.

<sup>98</sup> 위의 글.

학생들에게는 컴퓨터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과목, 혁명력사, 수학, 외국어만 가르치도록 교과목을 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sup>99</sup>

이는 컴퓨터교육을 제1고등중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체제에서 컴퓨터 부문 영재교육기관을 특화시킨 것이다. 북한이 기존의 영재교육기관인 평양제1중학교가 아닌 예체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금성제1·2중학교에 컴퓨터수재반을 설치한 것은 컴퓨터와 교재, 교수인력 등이 모든 제1중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인력개발 체계의 특성상 특정한 산업 부문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수를 계획하여 일정한 규모로 양성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사회 정보화와 개방화보다는 ‘제한적인 정보화’ 정책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00</sup>

북한은 첨단과학기술교육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지로 IT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은 그리 좋지 않다. 컴퓨터 보유대수는 대략 50만대가 채 안 된다. 100명당 2대가 조금 못되는 비율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sup>101</sup> 몇몇 시범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학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컴퓨터교육의 물질적 기초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는 대부분 학생들의 ‘외화벌이’나 학부모의 지원에 의해서 마련된다. 그러다보니 교육여건과 수준에 있어 학교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지로 컴퓨터를 충분히 다루어보는 것은 일부 학교나 컴퓨터 소조로 편성된 학생들에게나 가능한 실정이다. 다음은 다양한 지역의 중등학교에서 공부했던 북한이탈청소

<sup>99</sup> 교원신문사, “컴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교원선전수첩 2』 (평양: 교원신문사, 2003), pp. 75-76.

<sup>100</sup>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13.

<sup>101</sup> 위의 글, p. 8.

년들이 자신이 받은 컴퓨터교육에 대해 구술한 내용이다.

88년도에 저희 컴퓨터가 생겨 가지구요, 6학년들만 배워주고, 그 전에 안 배워줬거든요. 제 88년도에 소조로 컴퓨터 배우고, 89년도에는 6학년 과정으로 컴퓨터 배웠구요. 저희가 컴퓨터실을 소조방으로 썼는데요, 저희는 컴퓨터를 마음대로 썼는데 다른 애들은 컴퓨터 못 썼거든요. 어떤 여학교 학생들은 와 가지고 자기네는 종이에다 컴퓨터 자판 그려놓고 연습했는데, 프로그램 짜는 거는 우리보다 잘 하는데 실제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동작되는가 보고 깜짝 놀랐던 그 때 기억이 나네요.<sup>102</sup>

컴퓨터에 대해선 제가 전혀... 고등중학교 졸업할, 그때 91년도 졸업할 때, 그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수학 과정안에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어디 따로 가서 교육받고 와서 수학선생이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더라구요. 컴퓨터란 건 제가 지방에 있어서, 지방엔 전혀 컴퓨터라곤 볼래야 볼 수 없고.<sup>103</sup>

근데 학교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런 마분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반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우리 자판기처럼 막 그려 가지고, 이렇게 막 연습하고 있어요. 다 만들라고 선생이 강요를 했죠. 근데 이것대로 굴러다니지. 애들이 이게 뭐 흥이 있어야 갖고 또 누르고 재미가 있지.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는데. 컴퓨터 교과서도 교수용밖에 없으니까, 애들은 컴퓨터 학습장이 있지 교과서는 없다니깐요.<sup>104</sup>

컴퓨터 소조가 있었어요. 4학년 때 컴퓨터가 석 대가 인입이 되었어요. 저도 수학소조니까 간간히 해볼 기회가 있어 가지고 배웠는데, 베이직, 포트란 이런 프로그램을 배웠거든요. 컴퓨터 소조는 수학소조에서도 선발된 아주 제한된 인원만, 선발된 학생들만, 특수 의 또 특수인거죠. 컴퓨터 소조가 우리 학교의 경우 한 학년에

<sup>102</sup> J3, 평양제1고등중학교 졸업(1984-1989), 조정아 면담(2003년 11월).

<sup>103</sup> H3, 함흥시 고등중학교 졸업(1986-1991), 조정아 면담(2003년 11월).

<sup>104</sup> C1, 함경북도 인민학교 교사(1984-1996), 조정아 면담(2005년 5월).

세 명. 정말로 가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기회는 그 소조에 한해 서만 한 사람에게 30분 정도, 많아야 40분 정도 줬거든요.<sup>105</sup> 타자도 배워주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저희 학교는 컴퓨터가 좀 많이 있었죠, 한 50대 정도. 컴퓨터 구입을 할려면 외화벌이, 그러니까 학생들 방학이나 수업을 빨리 당기고 나머지 외화벌이, 도토리나 송이버섯 채취를 보내거든요. 그게 돈이 되면 컴퓨터를 구입합니다.<sup>106</sup>

이상의 증언은 공식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컴퓨터교육 환경은 제1중학교나 극히 일부 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역별, 학교별로 컴퓨터 교육 환경에 큰 편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집중적으로 IT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영재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학교나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학교에 컴퓨터가 50대 정도 있다는 함흥시의 한 학교의 경우 학교가 군부대 지역에 있고 학부모들이 대부분 군인이어서, 그중 지위가 높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송이버섯 채취와 같은 외화벌이를 시켜서 그 수익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한다.<sup>107</sup>

영재교육기관과 일반중학교는 컴퓨터 보유대수 등의 교육 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다음의 표는 북한의 각급 중등교육기관의 컴퓨터 교육 관련 교과목과 교육 시간, 컴퓨터 보유 현황의 차이를 보여준다.

<sup>105</sup> K2, 청진시 고등중학교 졸업(1986-1991), 전문대학 졸업(1992-), 조정아 면담(2003년 11월).

<sup>106</sup> J2, 함흥시 고등중학교 졸업(1991-1996), 조정아 면담(2003년 11월).

<sup>107</sup>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에 의하면 한편 일부 부유층에서는 자택에 개인용 컴퓨터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표 III-1> 중등 컴퓨터 영재교육 현황 비교<sup>108</sup>

구분	교과목	수업시간 (6년)	컴퓨터보유 현황 (1개교)
금성제1·2중학교	컴퓨터회로와 주변장치 C와 C++언어 프로그램작성법 윈도우 조작체계 컴퓨터수학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자료기저관리프로그램 Visual D-Base와 Access 리눅스 프로그램 작성법 인공지능언어 Lisp와 Prolog 자연언어처리와 인공지능 컴퓨터통신과 네트워크	1,660시간	최소1,300여대 이상
평양제1중학교	전자계산기수학 프로그램 작성법 전자계산기장치 컴퓨터자료통신 알고리즘 이론 데이터자료기저 윈도우체계 프로그램 인공지능 리눅스 작성법 인터넷과 그 리용	400시간	100여대
다른 제1중학교	전자계산기수학 프로그램 작성법 전자계산기장치 컴퓨터자료통신	280시간	10여대
일반중학교	컴퓨터와 프로그램	30시간	1대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1996년에 평양 프로그램 강습소, 1997년에 김책공대 컴퓨터정보센터, 1999년에는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이 설립되었으며, 2001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학부가 설치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대학에서 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과, 정보처리학과 등 정보통신 관련 학과가 신설되었다. 2003년에 대학

<sup>108</sup>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 44.

에 23개, 전문학교에 6개의 정보공학과를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77개 대학에서 정보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sup>109</sup>

현재 북한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IT교육은 중심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IT최고전문가 양성과 컴퓨터기술대학과 일반대학에서 이루어지는 IT실무기술자 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IT최고전문가 양성기관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조선컴퓨터센터가 대표적이고, IT실무기술자 양성기관으로는 평양과 함흥의 컴퓨터기술대학과 평양인쇄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라진해운대학 등이 있다. 또한 기존 산업 부문에 IT를 접목하는 ‘경제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IT경제교육’이라 칭하며, IT교육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 이 분야 출신자들은 각 산업분야의 생산공정 자동화와 함께 발전소, 철도 분야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컴퓨터화에 종사하고 있다.<sup>110</sup>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양프로그램학원, 평양정보센터, 인민대학습당 등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양정보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강습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설립된 곳이다. 이곳에는 300여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경영관리 DB구축, 컴퓨터 건축 설계 등을 교육하고 있다. 전문가반과 비전문가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1-2개월이라고 한다.

또한, 2000년대 들어 TV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컴퓨터 교육을 실

<sup>109</sup>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4).

<sup>110</sup>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 15-34.

시하고 있고, ‘정보기술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기술학습의 날’을 선정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내각 정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기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sup>111</sup>

## 라. ‘지능교육’ 방침 강화와 교육방법론 연구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IT 교육의 기초로 ‘지능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지능교육은 “제반 인식능력과 응용능력을 키워주는 과정”<sup>112</sup>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사고력을 비롯한 지적능력과 지식탐구방법의 향상을 포함한다.<sup>113</sup> 지능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사고 위주의 창조력, 상상력, 활용능력을 적극 개방할 수 있다고 본다.<sup>114</sup>

2004년 1월 1일 북한 교육상 김용진은 교육신문에 게재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라는 글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능교육과 교육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5년 1월 27일 교육신문 사설에서는 “새 세대들에 대한 지능교육, 과학기술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여기에 현시대의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후비를 체계적으로 키워내며 나라의 전반적과학자, 기술자대렬을 질량적으로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 기본담보가 있다”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지능교육

<sup>111</sup> 위의 글, p. 36.

<sup>112</sup> 남진우 외, 『사회주의교육학』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p. 142.

<sup>113</sup> “당의 지능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교육신문』, 2005년 1월 27일.

<sup>114</sup> “뜻깊은 올해의 새학년도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자,” 『교육신문』, 2005년 3월 31일.

에 주력하여 정보산업시대에 필요한 지능 수준과 창조적 능력이 높은 인재를 육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능교육은 현재 주로 교육방법 개선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학습 방법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내지 주입식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연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는 실험, 토론, 노작 등 자기발견적 교수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답이 늘 주어지고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을 기반으로 모든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자기발견적 학습은 거의 불가능하다.<sup>115</sup> 북한에서도 “지식을 뒤주 안에 넣어주는 지식전수주의 틀이 먹이는 교육방법, 배운 것을 그대로 외워바치는 기억위주의 암기식학습방법”이라고 기존의 관성적인 교육방법을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sup>116</sup>

‘지식을 뒤주 안에 넣어주는 교육’은 교사가 특정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의미하는 반면, 지능교육은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지능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고활동의 조직자,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117</sup>

지능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마다 과목별 지능문제 만들기, 소논문 집필, 지능문제풀이 경연<sup>118</sup>,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등을 실시하

---

<sup>115</sup> 차우규, “북한의 교육 개발 방향과 전략,” 『평화를 위한 우리의 한반도 정책 대구상』 (통일문제연구협의회, 2005), p. 398.

<sup>116</sup> 리영복,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실력있는 혁명 인재육성의 중요담보,” 『교육신문』, 2005년 1월 27일.

<sup>117</sup> 조영철·김철, “지능교수방법을 적극 탐구해나가자,” 『교육신문』, 2005년 7월 28일.

<sup>118</sup> 이는 과목별로 지능문제를 뽑아 야외게시판에 3~5문제씩 써놓으면 학생들이

고, 교원들을 위한 교수방법 강습, 과목별 교수교양경험발표회, 교수 방법토론회 등을 조직하고 있다.<sup>119</sup>

또한 ‘새교수방법 등록증’ 제도와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 수여 등을 비롯하여 교사들의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와 교재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다. ‘새교수방법 등록증’ 제도는 2000년대 들어 시행된 것으로, 교원들이 자신의 담당 과목의 특정 내용을 수업함에 있어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이에 관한 소논문을 제출하면 학교의 ‘새교수방법 심의위원회’와 교육성에서 연 2회 심사하여 선발된 교사에게 ‘새교수방법 등록증’을 수여하는 것이다.<sup>120</sup> ‘새교수방법 등록증’ 수여시 다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는 않으나, 중고등교육기관의 교원들이 급수 사정이나 학사학위 취득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10월 8일 모범교수자’ 칭호는 김정일이 2003년 무봉중학교 현지 지도를 실시한 것을 기념하여 우수 교원에게 칭호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교사의 교육연한, 업적, 경력, 학생과 학교에서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학교별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교수 경연과 교육성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이 또한 물질적 인센티브는 거의 없지만, 승급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sup>121</sup>

---

해답을 게시판 옆의 함에 넣고, 매주 토요일에 문제풀이 현황을 평가하여 개인별, 학급별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끄러나가자,” 『교육신문』, 2005년 6월 9일).

<sup>119</sup> 동철, “혁명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교육신문』, 2005년 2월 24일.

<sup>120</sup> 소논문의 주제는 예를 들어 “항일무장투쟁사 강의에서 지리적 표상을 형성시켜 인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업”과 같은 식이다. (U1, 함경북도 교원대학 교원 (1997-2004), 조정아 면담(2005년 11월)).

<sup>121</sup> 칭호를 수여받았던 한 대학교원은 칭호 수여 후 임금이 2,600원에서 2,620원으로

이렇듯 북한에서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교사들의 교육 방법 개발에 대한 열의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력 뿐만 아니라 창조력과 상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능교육의 실현가능성은 교육 방법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원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고활동의 조직자, 안내자”라는 관점은 러시아 혁명 직후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관과 친화력을 가졌던 크롭스카야와 샤희키 등이 맑스의 교육론을 해석했던 방식이었다. 북한은 듀이를 비롯한 진보주의 교육학자들의 교육관에 대하여 “어린이들은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성장과정에 지나치게 간섭할 필요가 없으며 교육은 다만 성장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한 결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과학적 지식수준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sup>122</sup>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지능교육 방법과 진보주의 교육자들이나 크롭스카야 등의 소련 교육자들이 추구하였던 방향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장 분명한 차이는 북한 교육에서는 교육의 최종적인 도달 지점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교사의 역할은 정답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스스로 반성적,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보다는 정해진 지점에 이르는 사고의 과정이 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집단주의 교육에 있어서 사고교육이 사고의 집단주의에서 시작하며, 각 개인은 자신들의 지향을 집단 전체 및 기초집

---

인상되었다고 말한다. (U1, 함경북도 교원대학 교원(1997-2004), 조정아 면담(2005년 11월)).

<sup>122</sup> 김수진, 『주체의 교육론』 (동경: 학우서방, 1992), p. 49.

단의 제 목적과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과도 관련된다.<sup>123</sup> 그 점에서 지능교육은 기존의 ‘암기식·주입식 교육’을 그리 멀리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

<sup>123</sup> 정혜정, “북한 집단주의 교육과 J. Dewey의 개인주의 교육에 나타난 근대성과 사교육의 비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234.



# IV

## 북한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특성



## 1. 당·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노동인력 개발 체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골간이 되는 초·중·고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직장의 노동인력양성 및 재교육 체계를 비롯한 모든 노동인력 개발 체계가 국가의 계획적 관리 하에 조직, 운영된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과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안과 교재를 편찬하고, 지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인 교수요강을 작성하여 각급 교육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통일한다. 뿐만 아니라 진급 및 졸업, 입학은 국가시험제도에 의해 관리함으로써, 자격과 교육기회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북한에서도 국가와 당은 유일한 교육의 주체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외에도 직장, 사회단체, 각종 사회시설들이 교육을 주관하기도 하지만,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기본적인 교육 제도, 방향, 내용, 방법 등이 당에 의해 결정되어 하달되며 그 운영의 과정과 성과가 강력하게 통제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의 유일한 주체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주요 원칙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주도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국가의 사상문화교양의 무기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교육사업을 통하여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다그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인간개조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는 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북한 사회에서 교육은 인생의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중등교육 이수 후에도 성인들은 직업과 학습을 병행하며 각종의 정시제 교육기관 및 재교육 체계에서 교육받는다. 정규 학교교육체계와 정시제 교육기관간의 위계와 분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학령기와 비학령기의 구분도 뚜렷하지 않다. 공장과 기업소의 기술학습망이 생산조직을 따라 조직되어 있고 기술수준에 따라 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정시제 교육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조직 자체를 학습조직화하고 당과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에서 '교양'을 가장 우위에 뒀으로써 교육의 기회가 모든 성인들에게 확대된다.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의 최종 목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특징은 인간의 일생을 통해서 행해지는 교육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활동원리인 평생교육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성'의 원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

누구나 중등교육 수준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직장 내의 인력 개발 체계에 편입되고 생산의 장이 곧 학습의 장으로 조직되는 북한의 성인교육 체계는 '누구나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학습사회'의 이상에 접근하는 듯 보인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고른 분배 자체가 곧 이상적인 학습사회와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내면적인 교육요구가 얼마나 수용되는가, 교육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라는 점들이 또한 ‘학습사회’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를 평가해본다면 오히려 두 가지 수준에서의 자율성의 박탈이 눈에 띈다. 첫째, 국가로부터 각 노동인력 개발 기관의 자율성 또는 교사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육을 받는 각 개인에게 자신이 받고 싶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북한의 인력개발 체계가 지니는 특성 중의 하나인 주체의 단일성이라는 특징은 이상적인 평생교육체제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자체를 당과 국가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하나의 ‘거대한 학교’로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가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전 국민의 인적자원개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 통제하는 것은 국민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신념체계를 지닌 특정한 인간형으로 주조한다는 실질적인 기능 이외에도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더 나아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산출한다. 북한에서 교육의 재원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나 집단의 지원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학부모 개인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사적으로 지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합되어 사용됨으로써, 사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공공성의 성격을 띠게 된다.<sup>124</sup> 즉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여 자기 자식에게 양질의 교육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교육시키고, 그 중 지적인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학부모

<sup>124</sup> 이향규, “해방 후 50년간 남북한 교육기회의 확대 과정과 특징,” 『한국교육사고 연구노트』 제14호 (2000), p. 23.

들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학부모들에 비해 자녀교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을 덜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자녀교육에 대한 이러한 북한 부모들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북한에는 학교교육으로 모든 게 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책임으로 안 느껴요. 학교에서 니가 잘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아요. 집에 오게 되면은 “애, 숙제를 했니? 숙제를 해라”, 이거는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 책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 (아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는) 절대 안 느껴요. 절대 아니예요! 이걸 학교에서 애가 지적으로 능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스스로 책임감은 안 느껴요.<sup>125</sup>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해서 그렇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 공부 책임 못 저 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학교와 본인, 이렇게 생각하지, 부모가 관심을 안돌려서 그렇다고 생각 안하는 거죠. 부모들이 교육은 모두 학교 책임이고, 개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sup>126</sup>

## 2. 생산과 교육의 결합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특히 산업화 시기에 소련과의 교육 및 문화 교류를 통하여 종합기술교육의 이론과 제도가 도입되었다. 북한에서는 종합기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종합기술교육이 표방하고 있는 바를 교육의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있다. 종합기

<sup>125</sup> C1, 함경북도 인민학교 교사(1984-1996), 조정아 면담(2005년 5월).

<sup>126</sup> H2, 함경북도 대학교 교원(1979-2002), 조정아 면담(2005년 11월).

술교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한다는 것은 교육을 실천상의 요구와 밀착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뿐만 아니라, 제 분야에서 실천적 능력을 겸비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27</sup> 이는 특정한 분야의 직업기능을 훈련시키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이론적 기초와 광범위한 안목을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합기술교육의 원리를 북한의 교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 4 조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하며 교육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하도록 한다.

제 29 조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

또한 1977년에 발표되어 1999년 교육법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북한 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칙, 교육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다음과 같이 ‘교육과 혁명실천 결합’을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원칙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하나를 가르쳐도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가르칠수 있으며 사람들을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울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혁명실천과

<sup>127</sup> 남진우 외, 『사회주의교육학』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p. 40.

결부되지 않은 순수 이론을 위한 이론, 지식을 위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반 원리와 이론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가르치며 모든 이론과 지식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과학기술 교육, 예체능교육으로 크게 구분되고, 이 분야간의 긴밀한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담당하게 될 생산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 및 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부문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과 영역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초과학분야의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전문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지식을 체득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sup>128</sup>

일반지식교육 관련 교과와 함께 기초과학분야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은 기초기술교육이다. 이는 자연과학의 지식을 응용한 생산과 기술의 기초 원리와 전 산업부문에서 활용될 기초적인 기술 및 지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기학, 기계의 일반 구조와 원리, 전자 및 자동화 설비의 구조와 기초 원리, 제도의 기초, 간단한 기계부분품에 대한 도면 해석과 작성, 기계, 자동차, 트랙터 등 기초적인 기계의 구조와 작용원리 및 운전기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종합기술교육의 또 한가지 축은 노동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이라 말한다. 생산노동은 아동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

<sup>128</sup> 위의 책, p. 94.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현재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산노동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과목 수업에서 교육내용을 생산과 결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을 직접적인 교육의 과정으로 도입하였다. 생산노동을 통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생산에 필요한 실제적 기술 기능을 훈련하고 생산 관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며 노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았다.

노동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한 196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교육 목적에 따라 노동을 통한 교육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설정되었다.<sup>129</sup> 첫째, 현대 생산의 일반적 원리와 과학의 기본이다. 둘째, 다양한 생산 부문에서 생산적 기능과 숙련이다. 셋째, 생산 계획의 수립, 노동력 조직, 생산 경쟁, 노동력 계산 및 평가 등 생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지식과 기능이다. 넷째,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와 생산 문화, 직업적 정체성이다.

1977년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을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생산로동에서 유리되어 학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응용능력을 키우며 현실에 대한 체험과 로동에 대한 숙련을 쌓는다.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데서 교육학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교육 일변에만 치우치면서 생산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지나치게 많이 참가시키는 경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한다. 학생

<sup>129</sup> 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 전문 학교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0), pp. 192-193.

들의 생산노동은 교육교양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1970년대를 경유하면서 생산실습을 교육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 취약해지고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기술 교육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학문지향적 교육과정의 성격이 강해지게 된다. 노동을 통한 교육도 봄철 농번기에 1-2개월, 가을 추수기에 1개월 정도의 단순 노동의 형태로 교육적 의미와 분리된 채 남아있게 된다.

다음 <표 IV-1>, <표 IV-2>은 시기별 북한 중등학교 교과영역별 시간 비중과 한국 및 사회주의 국가의 교과영역별 시간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표 IV-1> 중등교육과정의 교과 영역별 비중 비교

교과영역별 비중 국가	언어	사회과학 (정치사상)	수학· 자연과학	기초기술 (Polytechnic)	예체능
북한(1962)	15.5	7.7	33.7	38.9	4.1
북한(1983)	22.8	20.9	39.2	8.2	8.8
북한(2001)	25.0	22.5	39.9	6.0	7.5
한국(7차)	27.7	18.8	25.9	9.8	17.9
소련(1957)	46.7		36.8	10.5	6.0
소련 <sup>130</sup>	26.0	8.7	35.9	18.6	10.8
동독(7학년) <sup>131</sup>	36.6	8.7	28.6	7.1	19.0

<sup>130</sup> J, Morison, "Recent Developments in Political Education in Soviet Union," *The Making of the Soviet Citizen* (London · New York · Sydney: Croom Helm, 1987), pp. 46-49. 초등 3년, 중등 8년 중 중등 8년 교육과정 비중임.

<sup>131</sup> 동독 교육과정 구성은 V. D. Rust & D. Rust(1995), *The Unification of German Education*, p. 74에서 인용. 예체능시간수 비중은 군사학 1.93%가 포함된 수치임.

<표 IV-2> 남북한 교육과정 교과 영역별 비중 비교

남한 중고등학교			북한 중학교		
교과명	시간수(%)		교과명	시간수(%)	
도덕	5.4		김일성 혁명활동 김일성 혁명력사 김정일 혁명활동 김정일 혁명력사 김정숙 혁명활동 공산주의 도덕	1.5 3.0 1.5 3.0 0.5 3.0	12.5
국어	15.2		국어 문학	7.0 4.5	11.5
영어	12.5		한문 외국어	4.0 9.5	13.5
사회	13.4		역사 지리	5.0 5.0	10.0
수학	13.4		수학	18.9	18.9
과학	12.5		물리 화학 생물	8.0 6.5 6.5	21.0
체육 음악 미술	8.9 4.5 4.5	17.9	체육 음악 미술	4.5 2.0 1.0	7.5
기술, 가정	9.8		제도 컴퓨터	1.0 5.0	6.0

※ 남한의 교육과정은 1997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을, 북한은 2001년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학교급별 전체 시간 수(남한의 경우,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을 제외한 전체 시간 수)를 기준으로 각 교과별 시간비중을 나타낸 것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비중은 시기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산업화 초기인 1962년에는 기초기술교과의 비중이 40%에 가까운 데 비해 정치사상 교과를 비롯한 사회과학 교과 비중은 7.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정치사상교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20%를 넘는데 비하여 기초기술교과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6.0%로 여타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남한보다도 그 비중이 작다. 수학 및 자연과학 교과는 꾸준히 30% 이상의 높은 시간 비중이 유지되어 왔고, 현재에도 거의 40%에 가까운 시간 비중으로, 이 역시 여타 사회주의 국가 및 남한보다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교육과정은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표방하지만 적어도 교과목 구성을 볼 때에는 기초기술교육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3. 정시제 교육기관의 발달

노동과 교육의 결합이라는 종합기술교육의 원리는 내용과 방법 측면만이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구현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라고 불리는 정시제 실업교육 기관이다. 공장대학과 같은 직장부설 교육기관과 통신대학, 야간대학, 방송대학 등에서 정시제 형태로 노동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직접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술교육은 중등학교 교육과는 달리 기술과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기술은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과학지식이며 개별적 생산공정에 대한 전문기술지식을 의미한다. 기능은 숙련, 경험과 함께 노동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의 구성요소로, 이미 습득한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일정한 제품의 생산이나 생산공정을 담당할 준비와 숙련 정도를 의미한다.<sup>132</sup> 기술기능교육은 중등일반교육

<sup>132</sup> 리창근, 『우리당에 의한 로동행정 리론의 심화발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03.

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의 생산능력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므로 공장과 기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장 부설 노동인력 개발기관으로 대표적인 기관이 공장대학이다. 공장대학은 공장 노동자들이 낮에는 직무를 수행하고 일과 후에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그 공장의 기술 부문과 연관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과 기업소에 부설하여 설치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의 운영에 있어 기술인원과 기술장비를 비롯한 공장 내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기술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은 공장대학의 장점의 하나로 꼽힌다.<sup>133</sup> 공장대학은 본학부와 관리일군양성반으로 구분된다. 본학부는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 중 대학 예비과와 중학교를 졸업한 노동자들이 입학하며, 졸업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기사 자격이 주어진다. 공장관리일군양성반에서는 공장의 현직관리자 및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공장대학 본학부가 5-6년, 관리일군양성반이 4-5년, 고등전문학교 3-4년이다. 야간고등전문학교나 공장대학은 국가가 교원을 파견하여 관리한다. 공장대학의 학장과 경리부학장은 기업소 지배인과 부지배인이 겸임한다. 공장대학의 학생수는 그 지역의 기업소·공장의 기술간부 수요를 반영한 국가의 종합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그 공장의 직종과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다. 500명 내외로 규모가 비교적 큰 학교도 있지만, 학생은 20-30명, 교사는 교장, 부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인 경우도 적지 않다.

수업 운영은 국가에서 결정한 교육강령에 따라 진행한다. 강의, 연습, 학과토론, 실험, 논문 작성 등을 국가가 제정한 과정안에 의하여

---

<sup>133</sup> 『로동신문』, 1970년 9월 1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기말, 학년말, 졸업 시험은 ‘대학 및 고등 전문학교 시험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목은 전공교과목과 공통과목으로 나뉘며, 전공교과목은 해당 공장이나 기업소의 지역특성에 맞도록 기계의 조작, 운수, 보수 등으로부터 신기종의 개발 및 각 공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술 문제 등으로 구성되고, 공통과목은 생산과 과학의 기초인 수학, 물리학, 화학, 이론역학 등의 과목과 공산주의적 품성을 가진 혁명인재로 기르기 위한 당투쟁사, 맑스-레닌주의 과목 등으로 구성된다.<sup>134</sup>

공장대학에서는 교사들이 강의 내용을 공장의 구체적인 생산현실과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장강의가 장려된다. 현장강의를 통해서도 공장의 기계설비, 생산공정에 응용되는 과학 이론과 기계 작동법 등을 교육한다.<sup>135</sup>

공장대학을 졸업하면 일반 이공계 대학과 같은 기사자격증이 수여된다. 공장대학 학생들의 교육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학기말시험, 학년말시험, 국가졸업시험 등이 있는데 이들 시험은 교육위원회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sup>136</sup> 공장대학의 졸업논문은 생산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주제로 선정된다.<sup>137</sup>

대학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교육기자재 확보는 공장, 기업소와 그 상

<sup>134</sup> 이은영, 『북한공장대학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 90.

<sup>135</sup> 『근로자』, 1985년 3월호.

<sup>136</sup> 『내외통신 종합판』 45호, 1992년 2월 28일, 이은영, 『북한공장대학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 79에서 재인용.

<sup>137</sup> 예를 보면 북중 기계공장의 공장대학에서는 공장의 400마력 디젤 기관 생산과 관련된 “이용선 모형에 의한 정밀 구조”(『로동신문』, 1965년 9월 29일), 덕천자동차공장에 설치된 덕천공업대학에서는 자동차 생산기술과 관련된 “사슬 제작 자동반,” “갑 축의 정밀 구조”(『로동신문』, 1965년 8월 20일.) 등과 같은 주제가 논문의 주제로 선정된다.

부기관인 해당 부와 위원회가 담당한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과 학습 조건을 보장하며 출장, 동원, 기타 시간외 작업 등으로 인해 학습과 등교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장대학의 학생들은 일반교육기관과 달리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자 특성 및 교육 조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장대학 학생들은 감성적, 논리적 인식이 중학교 학생들보다 더 발달되어 있지만 학습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학습부담이 크고 업무와 학업을 병행함으로 인해 피로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학교과 수업에서 문법 위주의 수업을 지양하고 한꺼번에 많은 지식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들의 지적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체 수업과 개별지도를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되고 있다.<sup>138</sup> 또한 생산단위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직종과 수준에 맞게 교수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고, 출석률과 학습활동에 대한 “조직의 일상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sup>139</sup>, 교육 수준이나 일반인의 인식면에서 정규대학과의 격차가 크다는 문제가 존재한다.<sup>140</sup>

공장에서는 공장대학과 같은 학력인증교육 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sup>138</sup> 서명선, “공장대학 영어기초교육단계의 문법교수에서 나서는 교육학적 요구,” 『교원선진수첩 2』 (평양: 교원신문사, 2003), pp. 148-150.

<sup>139</sup> 『근로자』, 1981년 7월.

<sup>140</sup> 북한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탈북자들의 구술이나 소설 등을 통해서 공장대학의 교육 수준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등이 정규대학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80년대에 발표된 소설에는 세멘트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공장에 다니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공장대학이라구? 참 무엇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겠어. 도에만두 대학이 얼마데...” (백남룡, 『벗』 (평양: 문예출판사, 1982)).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교육도 실시된다. 공장내 직무교육 체계를 북한에서는 ‘기술기능학습체계’라고 부른다. 이를 통하여 생산의 단위인 작업반을 기본 단위로 하고, 노동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생산과 교육을 긴밀하게 결합시킨다.

기술기능학습체계는 교육 목적과 교육 대상의 기술 수준에 따라 기술기능학습반, 기능전습반, 개별기능전습조로 구분된다. 기술기능학습반은 직장 또는 작업반 단위에서 해당 인민경제부문의 특성과 직종 및 수준별로 조직된다. 기술기능학습반에는 기술학습반과 기능전습반이 있다.

기술학습반은 준기사반과 기사반으로 나뉘어 전공별로 조직된다. 기술학습반은 해당 기업소의 기사장이 준비하는 과정안과 학습요강에 따라 기술이론 강의와 기술토론, 기술협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기능전습반은 무기능공을 기능공으로, 기능공을 고급기능공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반이나 직장 단위에서 직종별로 조직된다. 기능전습반에서는 각 노동자들이 담당한 기계설비의 구조와 작업원리, 안전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운전조작법, 작업동작, 공구 사용법, 도면 독해법, 신기술과 선진작업방법 등을 교육한다. 기술기능학습은 매주 화요일 2시간씩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하며 연간 100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sup>141</sup> 실제로 공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는 일은 거의 없다.

이 이외에 기술자와 교관, 중견 및 고급기능공들이 개별적으로 무기능공을 몇 명씩 담당하여 같이 일하면서 기능을 전수하는 개별기능전습조가 있다. 교관제는 1982년 5월 27일 정무원결정 52호로 ‘공

---

<sup>141</sup> 리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p. 171.

장, 기업소 교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실시되었으며 교관의 배치와 해임은 노동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교관은 공장, 기업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생산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공로가 있거나 명예칭호를 받은 사람, 높은 기술기능을 가진 고급기능공과 특수 직종의 기능공 중 선발한다. 교관은 해마다 3-4명의 기능공을 직접 양성하도록 되어있다.<sup>142</sup>

#### 4. 기술교육과 노동규율 훈련의 결합

노동인력 개발의 두 가지 내용적 요소는 지식·기술교육과 노동규율 훈련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인력 개발에 있어 지식·기술의 교육과 사상·규범·태도의 교육은 각각 '專'과 '紅'이라 일컬어지며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sup>143</sup>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규율 훈련은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조직 활동과 일상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장의 당조직과 직맹, 청년동맹 등의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노동자들이 소속해있는 작업반을 단위로 일상적인 정치사상교육과 작업 수행 정도 및 직장생활 태도에 대한 '총화'가 이루어진다.<sup>144</sup>

<sup>142</sup> 위의 책, p. 172.

<sup>143</sup>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울즈와 긴티스는 미국의 학교교육을 분석하면서 학교에서 지식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적합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침으로써 순치된 노동력을 양성한다고 보았다.

<sup>144</sup> 북한의 공식 규정에 의하면, 작업반이란 "일정한 생산과제에 따라 공동작업이 수행되고 직접 기술혁신이 실현되는 생산의 말단 단위일 뿐 아니라 기업관리에 대중이 직접 참가하는 기본단위이며, 대중적 사상교양사업의 거점"이다(전정희,

정치학습은 당과 직업동맹, 청년동맹의 이중의 정치조직에 의해 지도된다. 공장당위원회 하부조직 중 선전부는 당원과 노동자들에게 당의 정책을 침투시키고 사상교양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공장대학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운영하는 각종 노동인력 개발 체계와 노동자구에 있는 교육기관의 사업을 지도한다.

당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치사상교양의 일환으로 노동규율 및 규범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진다. 북한의 노동 규범에서 가장 중시되는 요소는 노동에서의 자발성과 집단주의이다. ‘자각적 노동’이라는 기치 아래, 외부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개인 주체의 자율적 의지로 규칙을 준수하고 생산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가 강조된다. 북한에서 바람직한 노동의 태도와 관점은 ‘주체의 로동관’으로 집약된다. ‘주체의 로동관’에 의하면 노동의 자발성은 “자기 자신이 로동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로동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이다.<sup>145</sup> 이는 외적 강제나 보상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초하여 노동함을 의미한다. 공장의 노동규율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과 “누가 보건말건 자기의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성실하게” 자신에게 할당된 생산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노동의 자발성의 표현이라고 본다. 이는 근로시간과 자신의 직무에 한정된 성실성과 책임감에서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가 공장의 주인, 노동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업무 이외의 영역일지라도 필요한 일을 찾아서 수행하는 능동성과 헌신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발성과 함께 북한의 노동 규범을 특징짓는 요소는 집단주의이다.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새로운 형태”, 『근로자』, 제9호, 1964년 5월(상).  
<sup>145</sup> 백진규, 『주체의 로동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22.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이해를 집단의 이해에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의 로동관’에서 집단주의적 태도는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로동에 대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을 통하여 창출한 부가 개인 또는 특정 계급에게 착취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것이 되기 때문에,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곧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일치된다는 논리로 노동 규범으로서 집단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주체의 로동관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대한 충실성, 사회와 국가의 공동 재산을 자신의 것과 같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정신, 집단의 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집단주의적 노동의 태도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고 있다.

중등학교에서도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에게 교과교육과 교과의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적 노동규율을 훈련한다. 교과교육에서 노동규율과 관련된 내용은 정치사상교육의 일부로 진행된다. 북한 중등학교에서 정치사상교육의 주요 영역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주체사상원리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 등이다. 노동관 및 노동규율에 관한 교육은 이 중 ‘공산주의교양’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교과교육을 통한 노동규율 교육은 주로 ‘사회주의도덕’ 교과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등학교 교과서 내용 중 노동규율 관련 부분은 ‘일을 창발적으로’<sup>146</sup>, ‘로동과 참된 인간’<sup>147</sup>,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

<sup>146</sup> 이 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혁명과업수행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자면 남이 하는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그대로 본 따지 말고 창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을 창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제정되어 있는 규정과 질서와 규칙을 제멋대로 어기면서 제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일을 창발적으로 하는 태도는 자기 임무에 대한 주인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한상유 외, 『공산주의도덕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pp. 9-11).

도'148, '집단주의'149, '직업과 영예'150, '로동일가'151 등이 있다.

노동규율 형성에 있어 교육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업 형식과 학교 규율, 교과외 활동이다. 보울즈와 긴티스에 의하면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노동자로 준비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은 수업을 통해 전달되는 지식의 내용이기보다는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교육의 사회적 관계간의 형식적 상응성, 즉 노동현장을 통제하는 원리, 절차와 교육현장을 통제하는 원리, 절차간의 상응성이다.

북한 중등학교 수업 규율의 특성은 교사 주도의 엄격한 규율이 부과된다는 점이다.<sup>152</sup> 수업 진행에 있어 교사의 주도성과 복종이 강조되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규율은 매우 세부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잘 조직되지 못한 수업은 지식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sup>147</sup> 김완선 외, 『공산주의도덕 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pp. 52-54.

<sup>148</sup> 이 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여길 때에는 제 힘으로 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로동하는 사람은 참으로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는 또한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로동을 대하는 태도이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는 또한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성실하게 일하는데서 표현된다. 어렵고 힘든 일을 자진하여 앞장 서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 주건말건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위의 책, 2002, pp. 55-58.).

<sup>149</sup> 이 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집단주의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다. 집단의 이익속에는 개인의 이익도 들어 있으며 집단의 이익이 실현될때 개인의 이익도 실현되게 된다”(위의 책, pp. 63-64.).

<sup>150</sup> 이 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예는 사회와 집단에 기여하고 그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있다. 사람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하면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예이다. …영예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일한 공로가 크면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김완선 외, 『공산주의도덕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pp. 49-52).

<sup>151</sup> '로동일가'는 리복명이 1947년에 쓴 단편소설로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이다(김성우 외, 『문학 5』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pp. 38-46).

<sup>152</sup> 북한 수업 규율의 특성에 관해서는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14권 1호 (2004) 참조.

줄 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묵과된 무규율성이 수업 이외의 시간에 더욱 나타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무규율성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고 간주된다. 교사주도의 엄격한 규율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조직하고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는 대신, 규율과 자제력이 몸에 배어 있으며, 상부와 집단의 권위를 수용하는 데 익숙하며, 이 권위를 강화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든다.

소년단과 청년동맹 등 청소년 조직활동도 집단주의 규율을 훈련하는 주요한 장이다. 소년단과 청년동맹 조직에서는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도덕 규범과 준칙을 실생활과 결부시켜 인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사회주의 경쟁운동 방식은 소년단과 청년동맹 조직을 단위로 하는 집단적인 생산노동이나 대중운동에 적극 도입되었다. 집단적 경쟁은 소속집단 내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며 집단의 과업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서로 협동하여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타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집단이 보다 우수한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의 원리가 구현된다. 통계관, 순회 우승기, 승리의 깃발, 벽보, 표창 등 집단주의적 경쟁의 기본 단위가 되는 작업분조 및 분단 구조와 집단주의적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상징체계는 학교와 생산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울즈와 긴티스가 지적하였던 교육의 사회적 관계와 생산의 사회적 관계간의 형식적 상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회의도 학생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율화하는 기제이다. 이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아니라,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

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정치적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5. 학교와 생산현장의 연계 체계

북한의 교육 체계에서 중등교육은 종결교육의 성격을 띤다. 최근 들어 약간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중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의 졸업생이 군 입대나 취업을 선택한다. 대학 진학을 할 경우에도 소수의 ‘직통생’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군 복무 후 또는 직장 생활 후에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직업 선택은 주로 중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또는 군 제대 시기에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고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 배치 차원에서 직장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수의 생산요소 수요자 및 공급자가 만나 임금과 고용을 결정하는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국가가 가격 및 수량 결정, 자원배분 등 일체의 기능을 계획이라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서는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전 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고(제10조) 명기하고 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 받으며”(제5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고(제30

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신청에 의한 배치’를 통해 노동력을 채용한다.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관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소에서 노동행정기관이 배치하는 인력을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규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sup>153</sup>

경제 부문별 노동력의 배치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노동계획을 통해 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노동자수를 정하면 노동성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로력의 합리적 배치’라고 하여, 각 경제 부문별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노동자들을 각자의 능력과 체질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노동력 배치의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능력과 체질’이란 노동자들의 성, 연령, 체질, 기술기능 수준, 사상의식 수준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sup>154</sup>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장배치에 있어 당성과 성분이 학력, 자격, 실무능력, 등의 실무적 못지않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정한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갖춘 기술자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로동규률규정’ 제58조와 59조에 기관과 기업소가 기술자, 전문가와 기능공을 반드시 해당 전공 직제와 직종에 배치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특수기능공, 고급기능공은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 없이는 직종을 바꾸거나 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55</sup>

간부는 도·시·군당 간부부에서 배치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자, 사

<sup>153</sup> 선한승·문무기·윤문희·이종원·김진환, 『북한인력에 관한 법제·실태와 활용 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p. 42.

<sup>154</sup> 리창근, 『우리당에의한 로동행정 리론의 심화발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76.

<sup>155</sup> 리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p. 129.

무원, 당성과 근무 성적이 좋은 노동자 등이다. 일반 노동자는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일률적으로 배치한다.<sup>156</sup> 각 집단별로 직장을 배치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sup>157</sup>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대학이나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거주지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받은 이력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는 각 개인에 대한 평정서를 작성해 청년동맹이동증과 군사이동증, 식량정지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졸업 3개월 전에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제출한다. 노동과에서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졸업생들을 직장에 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탄광, 염전, 철도 및 도로 건설장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특정 중학교 졸업생들을 ‘무리배치’ 하기도 한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부 사업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당 간부부와 지방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치를 담당하지만 중앙급 대학의 졸업생은 내각 사무국 대학생 배치과에서 관할한다. 내각 사무국 대학생배치과에서는 직장 배치를 앞두고 졸업생들을 개별면담하는데, 이 이전에 대부분 개인의 출신성분과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로 직장을 배치한다. 전문학교 졸업예정자는 각 도와 직할시의 노동처에서 직장배치를 받게 된다.

제대군인의 경우 사병과 군관의 직장배치 과정이 다르다. 사병의 경우 출신 지역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직장배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병으로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소속부대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거나 당 지도원, 사무원이 되는 사례도 있

<sup>156</sup> 전병유·이일영·김연철·양문수, 『북한의 시장·기업 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pp. 42-45.

<sup>157</sup> 이하 집단별 직장 배치과정은 최종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 57-60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지만 대부분 특정 공장이나 탄광 등지로 집단배치를 받게 된다. 대위 이상의 군관으로 제대하는 사람들은 간부사업의 대상으로서 출신 지역 시·군 당 간부과에서 직장을 배치하는데 주로 출신지역의 공장이나 기업소의 지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 배치 후에는 곧바로 생산에 투입되기도 하지만, 기능공학교에서 양성훈련을 거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한 후 공정에 배치된다. 현재 북한의中等교육기관에서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바로 배치되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기술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종합기술교육은 주로 직업기술 습득의 바탕이 되는 광범위한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지식 획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직업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교육 내용으로 제도나 컴퓨터, 목공 등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중학교 졸업생들이 생산현장에 바로 투입될 경우 일반적으로 기능 습득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기능로력후비양성체계’라하여 단기 기술교육과정을 설치하여 대규모 공장에 배치되는 노동력에 대한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로력배치에 관한 규정세칙’ 제63조에 의하면 ‘기능로력후비양성’은 “사회적로동에 새로 참가하는 새세대들과 기능을 소유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직종의 작업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기능과 초보적인 로동경험을 체득시키는 직업교육”이다.<sup>158</sup> 이러한 양성훈련기관으로는 기능공학교와 기능공양성반이 있다. 기능공학교는 중학교 졸업생과 무기능자들에게 특정한 직종의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기술교육기관으로, 기능공학교의

---

<sup>158</sup> 리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pp. 174-176.

설치와 관리운영은 ‘기능공학교에 관한 규정’(1979년 6월 30일 정무원 결정 제49호)에 의거하고 있다. 기능공 양성 규모가 60명이 넘을 때는 기능공학교를 설치하며, 60명 미만일 경우에는 기능공양성반을 조직한다.

현재 기능공학교는 3급 이상 규모의 기업소에서는 대체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큰 공장의 경우 대부분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이를 거쳐 직무에 배치되고 있다. 학제는 6개월, 1년, 1년 6개월 등으로 다양하다. 노동자수가 적어 단위 기업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직종에서는 국가가 도 단위로 몇 개씩의 기능공학교를 만들어서 해당 분야의 노동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지방산업, 지방건설, 편의봉사, 도시경영부문 등의 기능공학교는 몇 개 부문을 합쳐 지역단위로 조직한다. 새로 조업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능공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사한 생산공정을 갖추고 있는 다른 공장에 기능공학교를 조직하여 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도 한다.

기능공학교의 설치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159</sup> 첫째, 기능공 수요를 예측하고 양성방법을 확정한다. 기능공 수요를 예측할 때 우선 직종에 따라 부족한 기능공 수요를 파악하며, 매년 직종 조절 등으로 인한 기능공 수의 변화를 계산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하여 기능공 수요를 예측한다. 이에 기초하여 양성 대상의 우선순위와 양성 방식을 확정한다. 둘째, 학교를 설치한다. 공장과 기업소는 학교를 설치할 장소를 정하고 교사 및 설비를 준비하고, 교원과 예비교원을 선발한다. 직종에 따라 교수요강을 제정하고, 학교설치운영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노동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상급부문에서 중앙노동행

---

<sup>159</sup> 강일규·김덕기·이은구,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 방안 연구』 (서울: 직업능력개발연구원, 2002), p. 135.

정부에 보고한다. 셋째, 학과위원회를 조직한다. 학과위원회는 학교 실정에 따라 3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학교와 기업 책임자는 ‘국가로력배치규정’에 근거하여 개학 1개월 전에 지방노동행정기관과 함께 학생모집계획을 결정하며, 기능공학교 시험규정에 따라 입학시험을 준비한다. 학생 선발 후 기능공 양성계획과 학생 현황에 따라 학급을 편성한다.

공장에 부설된 기능공학교의 학급 규모는 공장에 배치된 신규노동력인 중학교 졸업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한학급당 20명 내외로 몇 개 학급이 설치되고 학급이 직능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기능공학교의 교장은 일반적으로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이 겸임하지만, 부문별이나 지역 단위로 기능공학교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전임교장을 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교양만 담당하는 부교장과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있다. 기술교원은 정규 대학 졸업자거나 같은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공장대학 졸업자들로 공장에서 자체 임명한다. 기술교원은 생산은 하지 않고 교육만을 담당하며, 보통 교과목별로 한 명씩 있고, 일부 교원은 두 과목을 가르치기도 한다.

교육기간은 일년이 대부분이고 이론과 실습은 공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병행된다. 기능공학교는 단기간에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에 따른 작업동작 능력을 기르는 것을 주된 교육 목표로 삼는다. 기능공학교의 교육강령은 양성직종별로 작성하며, 기초지식과 기술, 해당 직종작업의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 기계설비의 구조와 작동원리, 노동안전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에 의하면 기능공학교에서는 처음 5개월간 이론 강의를 주로 하고, 6개월째부터는 오전이나 오후에 현장에서 생산 실습을 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공장의 실정

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교과목은 해당 공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학 두 과목, 예를 들어 제지공장의 경우에는 종이공학과 펄프공학, 공장의 공정과 관련되는 화학, 물리 등의 자연과학, 정치교과로 ‘김일성 혁명력사’, ‘현행당정책’ 등을 배운다고 한다. 공학 과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정치학습은 일주일에 2-3시간, 화학과 물리등 자연과학 교과는 1시간 정도씩 수업한다고 한다. 이 이외에 조직활동 등의 교과 외 활동은 중학교 생활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필기와 실습시험으로 구성되는 졸업시험 실시 후 기능급수를 부여한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당하는 기술급수를 받을 수 있지만, 시험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sup>160</sup>

기능공강습반은 기능공학교를 거치지 않고 공장, 기업소에 직접 들어오는 중학교 졸업생과 제대군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교육 과정이다. 기능공강습반은 안전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등 기초적인 기능을 집중강의와 견습의 방법으로 교육한다. 기능공강습반을 마친 노동자들은 기능급수사정시험 통과 후 작업에 배치된다.

현재 북한에 기능공학교나 기능공강습반과 같은 양성훈련기관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오래된 통계로 1984년에 기능공학교 등의 양성기관이 700여개라는 자료가 있을 뿐이다.<sup>161</sup>

<sup>160</sup>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에 의하면 화학이나 물리 등 이론 교과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과목은 성적이 나빠도 기계작동만 할 수 있으면 졸업할 수 있다고 한다.

<sup>161</sup> 리영환, 『조선교육사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 101.

V

북한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실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노동인력 개발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은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노동인력 개발 제도, 방향, 내용, 방법에 관한 기본적 방침이 당에 의해 결정되어 하달되고 그 운영의 과정과 성과가 강력하게 통제된다. 노동인력 개발 기관과 교사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며 각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다.

둘째, 노동인력 개발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종합기술교육의 원리가 적용된다.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간의 긴밀한 연계와 생산노동의 교육적 활용이 강조된다.

셋째, 교육기관 형태에 있어서 공장대학, 통신대학 등의 정시제 교육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직장 부설 또는 고등교육기관 부설 형태의 정시제 교육기관에서는 노동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및 재교육이 실시된다.

넷째, 노동인력 개발의 두 가지 내용적 요소는 지식·기술교육과 노동규율 훈련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규율 훈련은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조직 활동과 일상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등학교에서도 교과교육과 청소년 조직활동 등의 교과외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적 노동규율과 노동관을 습득시킨다.

다섯째, 북한에서 고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 배치 차원에서 직장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등학교 졸업자는 직장 배치 후 바로 생산에 투입되거나, 기능공학교에서 양성훈련을 거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한다.

왓킨스에 의하면 인적자원개발은 개인, 조직, 집단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을 통합한 계획적, 조직적 학습활동을 의미한다.<sup>162</sup> 인적자원개발 이론에서 인적자원개발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는 개인, 조직, 집단을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에 대입시켜보면 개인, 기업소, 국가로 볼 수 있다. 이중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는 집단이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며 특히 개인의 개발을 위한 영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하다. 이 세 영역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핵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집단, 즉 국가와 당의 비중이 너무 비대한 가운데 조직과 개인은 자체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집단의 지향과 어긋나는 행위, 관행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살펴볼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실태는 그러한 불일치의 지점을 보여준다.

## 1. 동원을 통한 교육 인프라 확대와 복구 노력의 실제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가 노동인력 개발의 계획과 운영의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노동인력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법 제44조에서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이 교육기관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갖추기 위한 후원사업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

<sup>162</sup> Watkins K. (1991), "Many Voice: defin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from different disciplines." *Adult Education Quarterly*, 41 (4), pp. 241-255.

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후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을 물질적, 기술적, 인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열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해방 직후 교육의 물질, 인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공교육체제와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다. 해방 후 학교를 건설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 건설을 위해 북한인민들은 성금과 성미를 모금하였다. 그 액수는 해마다 교육 예산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sup>163</sup> 주민들은 성금 뿐만 아니라 손수 벽돌을 찍고 쌓아 학교 건물을 지었으며 책걸상 등의 교구비품 제작을 직접 제작하였다.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학교를 건립하는데 일조하였다. 북한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김일성종합대학 역시 북한 주민들의 ‘애국미헌납운동’과 같은 조직적인 동원과 인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여 설립된 것이다.<sup>164</sup>

이러한 공교육 조직 방식은 초기 사회주의 사회 건설 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공교육 팽창과 공장대학 설립 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959년에 대학이 총 37개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1960년 한 해 동안 39개의 공장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

<sup>163</sup> 1949년 정부예산은 197억 6천만 원이고, 교육예산은 20억 8천만 원이었다. 이에 비해 북한인민들이 학교건설에 제공한 성금 및 성미총액은 1948년에 9억 5천만 원, 1949년에 10억 3천만 원에 달하였다(이향규, 『북한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 109).

<sup>164</sup>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이향규, 위의 글; 김기석,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연구,” 『교육이론』, 제10권 제1호 (1996); 신호숙, “해방후 북한고등교육체제의 형성과 특징: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제1호 (1998).

리용”한 설립 방식에 때문이었다.<sup>165</sup>

학교설립과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물적 자원의 부족을 교육열과 동원의 결합에 의하여 확보하는 방식은 90년대 경제난 이후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나라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후대교육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sup>166</sup>고 하며 교육의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조건 개선 및 교수방법 개선을 통한 교원자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학교 교실과 실험실습실 개축 및 보수, 교구비품 수리, 건물 도색, 운동장정리, 도로 포장, 화단 조성 등 다양한 개보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보다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후원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sup>167</sup>

2000년 8월에는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학교교육의

---

<sup>165</sup> 예를 들어 신의주 공업대학의 경우에는 19명의 시내 기관, 기업소의 책임일꾼들로 구성된 개교 준비위원회가 대학을 세우기 위한 후원 사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하였다. 경공업 위원회 신의주 건설 트레스트 제2직장 로동자들은 4개의 교실수리를 담당하여 한 개 작업반 분량의 생산력을 학교 건설을 위해 지원하고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하루 2시간 이상 시간 일을 더” 하였다. 벽돌 축조반원들은 교실 건설 작업에서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세 사람으로 한 개의 조를 뚫고 조건 경쟁을 체결하여 벽돌 쌓기 속도를 120% 이상 높”였다. 신의주 방직 공장을 비롯하여 신의주 제지 공장과 팔프 공장에서도 직장별로 1-2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대학 교사 건설장에 매일 20여명의 건설 인원을 지원하였다. 신의주 목공 생산협동 조합에서는 205개의 의자를 한주일 동안에 만들어 내고 뒤이어 책상 제작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신의주 렉스 공장에서 쓰던 건물 세 채를 수리하여 7개의 교실과 당 력사 연구실, 도서실, 교무실 등을 갖춘 신의주 공업 대학이 60년 9월 1일 개교하였다(『로동신문』, 1960년 9월 2일).

<sup>166</sup> 『교원신문』, 2001년 1월 1일.

<sup>167</sup> 『교원신문』, 2004년 6월 1일.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교육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워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중앙과 지방당 간부 강연을 통하여 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 군소재지에 교육부문 소개판을 만들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학교 지원 모범사례를 소개하도록 하였으며, 3월과 10월을 ‘학교 지원월간’으로 정하여 새학년도 교육을 위한 지원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설비를 현대화하고 교육조건을 갖추기 위해 ‘조선교육후원기금’을 설치하였다.<sup>168</sup>

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보면 현재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할당되고 있는 듯하다. 다음과 같은 증언은 현재는 북한 학교의 인프라 실태와 학부모 동원을 통한 교육 인프라 복구의 현실을 보여준다.

90년도에는 의자가 파손되거나 책상이 파손되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그걸 대신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전혀 안됐어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생들이 이런 교양 수업에 맞게끔 학교 내에 수영장을 하나 건설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영장을 건설하려면 국가가 세멘트나 모든걸 보상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일체 보장이 안됐어요. 근데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도 블럭도 있어야지 세멘트도 있어야지 인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안 지어주고 학교인들을 동원해서 해라 이러는데, 물론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건설분야에 있는 학부형을 만나면 막 자기네 공장 걸 갖다 자기 담임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학급 실정에 그런 간부가 없고, 그런 학부형이 없는 이런 데는 열악했거든요.

교실 유리창이 깨지면 저 같은 경우엔 이 방막을 쳐줄 수 있는 학부모를 택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알림문예다가 보내는 거예요. 교실에 이렇게 창문이 깨졌는데, 아무개 어머니 도와줄 수 없겠냐고, 그러면 비닐 방막을 보내요. 책상이 고장났다하면 학부형

<sup>168</sup> 『조선중앙방송』, 2005년 6월 8일.

회의를 해요. 학부형 회의는 해가지고 자기 책상은 자기가 수리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학교 교구비품 이런걸 어차피 후원단체가 학교에 있긴 있어요. 군적으로, 노동부, 공장, 탄광공장, 이 학교를 지원해라, 이런 후원 조항이 있지만 그게 잘 운용이 안 돼요.<sup>169</sup>

90년대부터 점점 어려워졌으니까 국가에서 예산투입을 하기가 까마득하였죠. 책상, 의자 등이 다 낡게 되고, 이전 같으면 국가에서 다 교체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못해줬죠. 우리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 책걸상을 다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자기 것을 다 바꾸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목수질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책상을 만들더라구요. 규격은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하고요.

1고중을 가니까 학교를 보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학급 별로 할당량을 맡겨 줬는데, 그게 학급의 수원에 따라 맡겨지는 거예요. 그 학급에 힘있는 학부형 하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공동분배를 한 사람당 얼마씩 하는 식으로 내고 그랬죠.<sup>170</sup>

이렇게 학교의 시설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학부모의 부담에 의존하는 현실은 경제난 이후 지속되고 있다. 특히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공장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독립채산제’와 ‘자력갱생’이 강조되면서 ‘학교꾸리기 사업’은 국가의 예산지원이 아닌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원칙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무상봉사이고, 학부형들의 자원봉사”<sup>171</sup>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sup>169</sup> C1, 함경북도 인민학교 교사(1984-1996), 조정아 면담(2005년11월).

<sup>170</sup> H2, 함경북도 대학 교원(1979-2001), 조정아 면담(2005년 11월).

<sup>171</sup> H2, 함경북도 대학 교원(1979-2001), 조정아 면담(2005년 11월).

이러한 현실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력 개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노동인력 개발의 구조, 정책, 내용을 통제하지만, 개별 공장 차원에서 실질적인 인력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1990년대에 간행된 노동관리 이론서에서는 공장의 노동인력 개발의 주요 원칙으로 각 공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공장과 기업소 자체양성을 위주로 하고 국가적인 인력양성기관이 이를 보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172</sup> 국가는 각 공장에 노동력을 배치하고 인력양성 및 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해당 공장이 실질적으로 양성 제도 운영에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자체적인 인력 개발을 해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평가하고 총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력 개발의 경우에 그것을 개별 공장에 전적으로 위임하지는 않지만, 학교교육처럼 국가가 그것을 전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도 없다. 이는 “국가가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북한 교육의 원칙과 실제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간의 적절한 타협지점이다. 직장 인력개발 체계 운영에서 물질, 인적 자원의 확보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은 각 기업소 자율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된다.

국가는 노동인력 개발의 제도와 핵심적인 정책을 구성하고, 노동인력 개발 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원은 대중의 교육열을 조직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확보하는 방식은 대규모의 예산 투자 없이 각 단위에 필요한 인력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초기 인력개발 체계의 형성과정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지만, 한

<sup>172</sup> 리창근, 『우리당에의한 로동행정 리론의 심화발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15.

편으로는 공적인 교육 투자를 인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로 대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예산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인력개발 체계의 질적 발전에 제약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열악한 현실에서 중앙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인력 개발의 질적 저하와 형식화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2. 종합기술교육의 변질

북한 노동인력 양성 체계의 가장 중요한 내용적 특성은 노동과 교육의 결합이라는 종합기술교육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학교 제도가 유지되었던 1966년까지 종합기술교육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정치교육의 강화 및 경제적 상황 악화에 따라 종합기술교육, 특히 기초기술교육과 실습 등이 유명무실해지게 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 중등학교에서 기초기술 및 실습 교과는 교육과정 시간수 비중에 있어서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나 남한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지도 못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의 중등학교에서 받았던 기초기술교과수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고등중학교 때는 제도를 배우는데, 그 제도 해가지고 참 별로였어요. 그냥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주는 거지요. 완전 복잡한 도면 말고, 간단한 도면 이런 거는 볼 수 있죠. 고등중학교에서는 기초적인 것들만 해주구요.<sup>173</sup>

실습이라는 게 일주일에 고조 한번이나. 그저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일을 하는데 가장 초보적인 거는 알아야 하니까. 소위 뭐, 대패면 대패질 할 줄 알고 그런 거. 가장 초보적인 고조, 그런 목공 실습 정도 했습니다. 목공장에 가면 드릴이라든가 기계 공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지도 밑에서 자체, 뭐 만드는. 기계 부속 같은 거 깎는 법도 배우고. 고조 다루는 법을 간단히 배우죠. 이걸 가장 소외되는, 이거 수업도 아니고, 고조 학생들의 기본 소양을 위해서 하는.<sup>174</sup>

기초기술 및 실습 교과 수업이 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하여 바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광범위한 직업기능을 훈련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과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습 및 실험 기자재와 교구의 부족이다. 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980년대부터는 실험실습 진행에 필요한 기구나 교구가 중앙에서 공급되지 않아 교사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확보해야만 했다고 한다.

60년대는 물질적인 보장으로 실험실습은 그때가 좀 더 잘 한 것 같아요. ...70년도까지는, 나라 재산, 재산이 조금 있을 때는 교육 자금으로 부분에 투자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험기구도 좀 나오고 시약도 좀 나왔는데, 최근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70년대 초반에 교육할 때만 해도 좀 나왔는데 후반엔 없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업소 실험실에 가서 뭐 어떻고 어떻고, 이런데 아이들 교수를 위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나 너무 아글타글 애들을 위해서 하는 인정에 못 이겨서 없는 것도 떨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술대학 같은 거 있어요 애들이 자동차 학부다 그럼 라디오 같은 거는 분해조립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 할 라디오가 없어.<sup>175</sup>

<sup>173</sup> K2, 청진시 고등중학교 졸업(1986-1991), 전문대학 졸업(1992-), 조정아 면담(2003년 11월).

<sup>174</sup> H3, 함흥시 고등중학교 졸업(1986-1991), 조정아 면담(2003년 11월).

모든 내용을 애들한테 직관화해가지고, 생동한 수업을 해라, 거짓말 수업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 수업을 할려고 보니까, 냉장고, 전반적으로 우리 노동자구에 냉장고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실물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안되는 거예요. ...교육 지령은 애들에게 산지식, 실물교육을 해라, 강령은 나오지만 그것이 수업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sup>176</sup>

이러한 실정은 고등교육이나 공장 부설 인력개발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응용부문에 들어서서는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기업소들이나 대학실험실들이나 나가서 실습을 하자면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배운 것은 현대적으로 배웠는데, 나가보면 설비들은 낙후되어 있고 대학 실험실에서조차 실험설비들이 제대로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실험을 할 수 없고 하니까, 배운 것을 결국은 까먹게 되고. 배우는 것은 배운데 그칠 뿐이지 응용하기에는 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대학에서 배운 것을 착상해가지고 그것을 옮겨보자면 설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더 설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응용해 보라고 하면 레이더 설비를 만들만한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sup>177</sup>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자기가 일하는 공장기업소의 기계들에 정통하고 대학생들이 설계도면까지 다 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요. 그러나 그 앞서 그 이상의 것을 활용할 수 없죠. 그 이상의 것을 하자면 어디 가서 원자재를 물어오면 되는데, 북한은 돈 있다고 어디 가서 살 데가 있는 게 아니고.<sup>178</sup>

노동과 교육의 결합을 통한 전면적으로 발달된 인간 양성이라는

<sup>175</sup> H4, 황해남도 고등중학교 교사(1970-1980), 조정아 면담(2003년 8월).

<sup>176</sup> C1, 함경북도 인민학교 교사(1984-1996), 조정아 면담(2005년 5월).

<sup>177</sup> L1, 건설분야 기업소 부직장장(1992-1996),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6월).

<sup>178</sup>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

종합기술교육의 지향으로부터 더욱 멀리 이탈한 것은 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생산노동이다. 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생산노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산노동은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현장실습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력 보충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실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실지 중학교 과정에 애들이 두 달씩, 그 다음에 가을에 한달, 무조건 농장동원해요. 무보수예요. 현실 체험이라 하게 되면 정말 2박3일로 해가지고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농장원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북한의 교육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말하는 게 교육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농장에 수확과 농장 근로능력이 모자라니까 학생을 대응능력을 쓰는 거예요, 노동인력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원칙대로 하려고 생각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농장원처럼 공수를 요구하고, 학교에서 공수를 떼어 가지고 오라거든요. 공수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노동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 학생들의 배운 내용을 실천과 결합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이나 생산단위를 가야만 실천과 내가 배운 것과 결합이 되겠는데, 이걸 순수 농장일 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자구에 있는 학교들에서도 그랬어요?) 다 농장 일을 나간다니까요. 그니깐 사실은 현실에 맞는 교육이 되자면 탄광에 하루 동안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걸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도자기 공장이 있어가지고 1박 2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걸 견학이 안돼요, 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내가 교원을 해봤지만, 깎아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나 똑같아요.<sup>179</sup>

<sup>179</sup> C1, 함북 인민학교 교사(1984-1996), 조정아 면담(2005년 5월). 괄호안의 글은 연구자가 질문한 내용임.

교육이 매개되지 않은 단순노동은 북한의 교육이론에서 제시하는 학습 내용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1-2개월간 학습의 중단으로 인하여 학습의 연계성 확보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부 중학교에서는 고학년 학생들 중 대학에 진학할 실력을 갖춘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생산노동을 면제하기도 한다.

나도 대학생활을 해봤는데, 공부하다가 한 보름 동안 부업농장에 나가서 일하고 나면 그 기간에 배웠던 영어단어, 그 기간에 배웠던 뭐,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연결해서 배워야 하는데 도중에 몇 달씩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 전에 배웠던 건 가물가물하지요.<sup>180</sup>

수학소조 학생들은 생활총화 같은 거, 비중이 큰 활동들은 참가하지만 비중이 덜한 활동들은 빼줘요. 그리고 6학년쯤 되면 아예 그것도 다 빼줘요. 중학교 봄, 가을에 농촌에 지원나가는 거, 거기서도 빼줘요.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지만…. 왜냐하면 학교에서 매해마다 대학가는 인원수에 따라서 그 학교 명예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명예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의 불법으로 진행을 해요. 교육법적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거죠.<sup>181</sup>

이는 오히려 생산노동이 교육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생산노동의 면제가 학과학습에 대한 긍정적 강화기제로 작용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

<sup>180</sup> K3, 인민경제대학 졸업(1980-1983),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6월).

<sup>181</sup> K2, 청진시 고등중학교 졸업(1986-1991), 전문대학 졸업, 조영아 면담(2003년 11월).

### 3. 공장 체제의 문제<sup>182</sup>

공장 내 인력 개발 체계로 다양한 현장훈련제도와 공장대학 등 직장 부설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져 있지만, 긴박하게 진행되는 생산의 과정과 장기적, 체계적인 인력 개발을 병행하는 것은 개별 공장 차원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로부터 공장 내의 생산과 인력 개발이 조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북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기술기능 관련 현장훈련 참가율은 지극히 낮다. 북한의 노동관계 법령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연한 기술교육 제도는 실지로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안전교양 이외에 별도의 기술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주일에 2시간씩 작업반장이나 숙련노동자로부터 정기적인 기술교육을 받았거나 매일 작업시작 전에 30분씩 기술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공장마다 기술교육의 형식과 방법, 수준 면에서 편차가 크다고 추정된다.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은 실지 공장내 기술교육의 현실을 보여준다.

---

<sup>182</sup> 이 글에서 ‘공장 체제’ 개념은 부라보이의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부라보이에 의하면 공장 체제(factory regime)는 두 가지의 정치적 계기를 지닌다. 첫째, 작업조직(organization of work)은 그 자체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들을 지닌다. 즉 사람들은 원료를 유용한 물건으로 전환시키면서, 특정한 사회 관계와 그에 관한 경험을 재생산한다. 둘째, 작업 조직 즉 노동과정(labour process)과 더불어, 생산 관계를 규제하는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생산 장치(political and ideological apparatuses of production)들이 존재한다(M. Burawoy, *The Politics of Production :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Thetford Press Ltd, 1985), pp. 7-8.).

기술학습을 매주 한번씩 하는 것도 짜증내는 사람들, 안 참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 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지, 무슨 매주 열심히 하겠는가. 직장에서 조직장 자체도 일을 막 미루는데, “야, 오늘 저녁에 너네 기술학습 하자”하면서 정시에 딱 시간 지키는 것도 드뭅니다.<sup>183</sup>

기능 학습이라고 한다면 제가 공장에서 한 서너 번 참가해봤나? 전체 18년 동안 말이죠. 화요일 날이 그날인데,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런 걸 무시하거든요. 그날에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동원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그 날에 다른 일을 시킨다든가. 기능에 대해서 그걸 중시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일을 잘 할려면 기능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되게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간에 한 서너번 참가한 것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참가한 기억에, 시험을 친다, 그 시험이 기능급수라는 시험이었어요. 제가 기능급수가 6급인 줄 알았거든요. 알아보니까 기능급수 4급이었어요.

매주일에 무슨 요일은 기술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해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기술전수하고. 급수시험 칠려고 신경도 안 써요.<sup>184</sup>

신입공들의 교육은 같이 일하는 거 보고 일을 배우죠.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지도하는 게 없거든요. 같이 그 뭐 오늘 이 작업반에 이 사람이 출근한다는데,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럼 출근하게 되면 작업반장이 니가 저 사람하고 같이 오늘 기계에 올라가라. 내가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앉아서 처음에 보거든요. 그러면 보고서 그 사람도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절로 뭐 한 보름씩 같이 다니면서, 기대를 맡겨 놓고.<sup>185</sup>

이상의 증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주 화요일은 기술학습의 날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술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공장도 있

<sup>183</sup> K1, 함경남도 연합기업소 노동자(1979-1998),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5월).

<sup>184</sup> K5, 함경북도 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1981-1999), 조정아 면담(2005년 8월).

<sup>185</sup> K5, 함경북도 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1981-1999), 조정아 면담(2005년 8월).

으며, 조업 사정에 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기술학습 체계를 통해 기능급수 획득을 위한 자격시험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의 기능급수를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다. 일반적으로 북한 공장의 현장훈련은 특별한 기술 교육이나 전수 형태가 아닌 신참자가 숙련노동자의 노동 동작을 보고 따라하면서 기능을 익히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공장대학 등 정시제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거의 매일 퇴근 후에 4시간 정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곤하여”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몇 번씩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기도 한다. 공장대학에 다니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공장대학 진학은 받은 자발적으로, 받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북한 공장에서 진행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평가의 지표 중의 하나가 기사와 준기사 확보율이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나이가 어린 노동자들에게 입학할 권하는 경우도 있다.<sup>186</sup> 따라서 공장대학의 교육 수준은 일반 대학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공장대학 학습자의 애로사항과 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공장대학이라는 게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온 학생들도 있고요, 우리처럼 군대복무 10년씩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공장에서 한 1-2년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나이 차이가 한 10년, 15

<sup>186</sup>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북한이탈주민은 공장대학에 다니는 노동자 중 70% 정도가 ‘역지로’ 학교에 다닌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장대학에 다니는 노동자들에게는 업무 이외에 부과되는 사회노동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이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 우리는 군사훈련도 받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연필 놓은 지 한 10년 됐으니까 다 있어먹었지만, 어제 그제 고등중학교로 책상 물리고 나온 학생들은 아주 공부하기 좋지요. 선생이 설명할 때는 일반적인데, 우리는 군대복 무까지 하니깐 나이 한 서른 네댓살씩 먹은 사람들인데, 계속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매 시간마다 하는 게 다 모르겠는데, 질문하면 얼굴 깎이죠.<sup>187</sup>

통신대학반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 나름대로 공부들은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자격도 받고 하는데, 그 성적을 못 따라줘요. 그리고 이 통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 대학 선생님들이 밥통이, 여기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받아먹어야 되는데, 월급 작지 출장비 작지, 그러니까 내려가서 ... 잘 얻어먹고, 갈 때 또 시골에 왔으니까 빵깡대학이라고 그래요. 빵깡대학이 뭐냐 하면, 물통 있죠, 물통. 북한에는 그거에다 술을 담고 다니거든요,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술, 담배 이런 뇌물로 대학을 졸업하는 게 통신대거든요.”<sup>188</sup>

공장의 인력개발 체계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생산과정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공급의 제약은 노동과정에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부족 경제에서 기업 관리자들은 공급 물자들, 즉 노동, 원료,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 기업들은 희소 자원을 찾아다니고 줄을 선다. 기업들은 가능하면 물자를 축장하며, 그래서 물자 부족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러한 전략들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하나의 투입을 다른 투입으로 대체하거나 심지어는 이용할 수 있는 투입에 맞추어 산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와 같은 조작들은 노동과정에서 시간적 순서의 변경과 작업 공정 재배치 등의 불

<sup>187</sup> K1, 함경남도 연합기업소 노동자(1979-1998),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5월).

<sup>188</sup> H4, 황해남도 고등중학교 교사(1970-1980), 조정아 면담(2003년 8월).

안정성을 야기한다. 계획 목표량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갑작스러운 돌격식 생산 현상을 초래하며, 생산은 대부분 계획 기간의 마지막 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sup>189</sup> 북한의 공장도 사회주의 생산과정이 지니는 불안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돌격식 생산’과 ‘생산의 파동성’<sup>190</sup>이 더욱 심화되었다. 돌격식 생산은 월초, 분기초에는 한가하다가 성과를 보고하는 시점인 월말, 분기말이 되면 한꺼번에 몰아서 작업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생산의 파동성이란 시기별로 생산실적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며 이것이 일정한 주기로 되풀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수령의 현기교시를 기일 내에 완수하기 위해서 ‘전투’, ‘돌격’ 이라는 명칭이 붙은 돌격노동을 수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돌격식 생산관행은 노동자들과 기술자들로 하여금 자기작업을 깊이 연구할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게 한다. 이는 결국 “이미 시험생산이 진행되던 것까지 낡은 방법으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기술혁신운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191</sup> 또한 돌격식 생산관행은 공장의 인력개발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sup>189</sup> M. Burawoy, *The Politics of Production :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Thetford Press Ltd, 1985), p. 210.

<sup>190</sup> 김일성은 1959년 9월 황해제철소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생산이 파동성을 보이는 것은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일성,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 (1959),”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194.). 그러나 이러한 생산의 파동성은 생산 자원의 부족과 축장, 경제 행위자들 간의 타협과 흥정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며,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sup>191</sup>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p. 308.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장에서 진행되는 기술교육은 “자기 직장과 자기 교대의 로동 기준량 수행”과 “무원칙한 연장 작업과 돌격식 작업, 각종 회의와 기타 행사”<sup>192</sup> 때문에 미루어졌다. 직장기능학교의 출석률은 월초와 분기초, 연초에는 일정 정도로 유지되지만 월말과 분기말, 연말에는 저조해지며 심지어는 “거의 학교문을 단다시피 하고 있는 현상”<sup>193</sup>이 나타났다.

교육의 파동은 생산의 파동과 같은 주기를 지니며 정반대의 방향으로 운동한다. 생산이 최고점에 있을 때 교육 참가율은 가장 낮았고 생산이 한가할 때 교육은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외부에서 지원되지 않고 공장 내에서 자체 조달되어야 하는 실정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교사인 숙련노동자와 학생인 미숙련노동자들이 일정 시간 생산에서 유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 단기적으로는 생산의 증가와 모순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전 공장적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인력 양성보다 눈앞의 생산목표 달성이 우선시된다. 기술기능향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업소별로 정규적인 교육체계를 세우지 않고서는 현행생산에 치우치면서 기술기능교육을 차요시하는 것과 같은 편향”<sup>194</sup>을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장의 관리자 등이 기능공양성기관의 학생들을 교육 대상이 아닌 노동력으로 보아 생산에 동원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의 노동인력 개발은 사회주의경쟁운동과

<sup>192</sup> 럽주식, “인민 교육 체계 개편에 따르는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임무,” 『경제건설』, 제12호 (1959), p. 29.

<sup>193</sup> 리혁수,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로동』, 제5호 (1959), p. 17.

<sup>194</sup> 위의 글, p. 112.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신기술 개발과 도입보다는 정치사상의식 제고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창의고안운동으로 대표되는 이 과정은 노동자의 경험과 창의력, 자발성에 의존하여 기술혁신과 생산능률의 증대를 이루려는 시도로,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공장체제의 역동 속에서 몇 가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 자본 투자에 의한 기술 개발과 신기술 도입이 아닌 생산과정의 단순한 확대인 외연적 축적체제의 문제점은 북한의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는 일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사회주의 경쟁운동의 과정에서 기술교육, 기술개발과 정치사상의식을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높은 기술 수준과 창의력 뿐만 아니라 높은 정치의식을 지닌 모범노동자의 사례를 각종 기술 및 정치교육을 통하여 일반노동자에게 보급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을 국가가 요구하는 모범적 노동자로 만들려는 시도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sup>195</sup>

현재 북한 공장에서 기술개발은 일반노동자들이 속해있는 작업조직이 아니라 일부 교육 및 숙련의 정도가 높은 노동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작업반이나 기술전담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개인적, 집단적인 기술 개발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기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창의고안운동과 같은 형태의 사회주의 경쟁운동과 노동인력 개발의 결합이 그다지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공장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은 행위자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노동에 대한 인식과 노동문화와 관련된 행위자 요소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북한의 노

<sup>195</sup>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조정아, “북한 공장의 기술인력 양성체제의 형성,”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 (2004) 참조.

동자들에게 노동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을 때우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직장 생활의 의미와 자신이 직장생활을 했던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획이 있는데 못 해도 되고, 불량품이 나와도 되고. 크게 일을 못했다고 반장이 직장장한테 혼나는 것은 봤는데, 일을 못 하면 쫓겨난다는 생각도 없고요. …좀 잘못해도 비판 받고 용서 받으면 되는 거지, 여기처럼 밥줄이 끊긴다든가 그런 물질적인 제재가 없어서 정신적인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힘들면, 한 달 정도 요양소, 정양소 가서 쉴 수도 있었어요. … 공장에서 5% 정도는 저처럼 잘 안 나오고 그래요. 식량난 이전에도 그랬어요.<sup>196</sup>

북에서는 출근만 하면 돈과 배급을 준단 말입니다. 다른 것 배운 사람은 여기와서 모르니까 도면도 못 보지, 기계 설계도 못하지, 잡부 노릇이나 하지요. 그러니까 국가만 녹지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자가 많단 말이지요.<sup>197</sup>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7시 반에 나가고 5시 반이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된다. 작업반장이 시키면 하면 된다. 시키면 하게 되는 것이죠.<sup>198</sup>

그저, 먹고 노는 것 밖에 생각이 없죠. 편안하게 지내자, 잘 먹자, 이런 생각만 하죠. 잘 먹고 자고, 어떻게 하면 아기가기하게 보내겠는가 하는 생각을 꿈꿨죠.<sup>199</sup>

이들에게 노동은 매일 반복되는, 그러저럭 견뎌야 할 지루한 일상

<sup>196</sup> K4, 함경북도 연합기업소 노동자(1983-1997), 조정아 면담(2004년 2월).

<sup>197</sup> K3, 인민경제대학 졸업(1980-1983),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6월).

<sup>198</sup> S1, 함경북도 공장노동자(1987-1999), 조정아 면담(2004년 2월).

<sup>199</sup> H5, 함경북도 탄광노동자(1988-2003), 조정아 면담(2004년 2월).

에 불과하다. 간혹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입당을 통한 정치적 출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노동자들은 대학은 못 나와도 당원은 되려고 한다.<sup>200</sup> 당원이 되는 것은 ‘우리 같은 하바닥’들이 ‘영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비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업교육을 통한 직업적 능력개발이나 자아발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드물다.

기술 개발에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당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그 쪽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데서 많이 출발하게 되죠.<sup>201</sup>

실력으로, 기술로 도전하는 세상이 아니예요. 멍텅구리도 한사발, 똑똑해도 한사발이야.<sup>202</sup>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안돼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다보니까 능동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시키는 것 외에는 할 줄 모르고 일 잘 못하고... 북한 사람들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일 시킬 때도 한참 애로를 느낄 것이예요. 여기(남한) 와서 직장에 다녀보니까 여기는 강압에 의한 조직적인 규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무나 책임감,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지각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일하는데, 저쪽은 안 그렇죠.<sup>203</sup>

이렇게 자신의 경력 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별 노동자들에게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력 제고가 국가의 방

<sup>200</sup> H5, 함경북도 탄광노동자(1988-2003), 조정아 면담(2004년 2월).

<sup>201</sup> K5, 함경북도 계강연합기업소 노동자(1981-1999), 조정아 면담(2005년 8월).

<sup>202</sup> H4, 황해남도 고등중학교 교사(1970-1980),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6월).

<sup>203</sup> L2, 노동자(1984-1991),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6월).

침에 부응하는 행위라는 정치적 의미 이외에 아무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배정된 직종과 공장을 벗어나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대학졸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사장 등과 같은 직위로 승진할 수 있는 길도 거의 없기 때문에 공장 내의 인력개발 체계를 활용한 기술개발은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흡인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제강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와서 처음 맛보게 된 기술 숙련의 즐거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접일은 처음 해 보는 일인데, 울산에서 학원 다녀가지고 용접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땀거든요. 그래서 취직해가지고 일하는데, 일 해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어떤 점이 재미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일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마지못해 일했거든요. 마지못해 사람 눈치를 보고 일하고, 한국에 와서 일해 보면 하루에 10시간씩 일할 때가 있는데, 연장사업 때까지 포함하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게 일하거든요. …남한에서 저의 용접기술이 낫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달라요. 한 주전에 한 용접하고, 지금의 용접하구는 많이 달라졌어요. 용접기술이 많이 느는구나. 내가 여기서 1년 혹은 더 많이 숙련해서 어디를 가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당당히 일할 수 있다고, 이런 걸로 생각 많이 들거든요.<sup>204</sup>

#### 4. 학교와 생산현장 간 연계 체계의 문제

사회주의 경제하에서 소유권의 국가부문으로의 집중은 노동시장과 기업효율성에 크게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노동을 작업에 배

<sup>204</sup> K5, 함경북도 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1981-1999), 조정아 면담(2005년 8월).

분하는 권한을 국가가 가짐으로써 국가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개별 노동자에게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둘째, 학교 졸업생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평생노동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작업단위를 할당받는다. 작업장에 나타나 공동의 최소한의 노력기준을 달성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서비스를 개발축적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작동할 여지가 없게 된다. 더 숙련되고 의욕이 있는 노동자들은 효율적으로 고용되지 못한다. 투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질에 대해서 보상되지 않게 때문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체화된 기술변화를 축적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혁신이 상실된다.<sup>205</sup>

이러한 특성은 북한의 학교와 생산현장간의 연계 체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력 배치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작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인력 양성과 배치에 관한 계획은 중장기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산업적 변화 요인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계획과 실지로 필요한 노동력 수요와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를 두고 한 북한 이탈주민은 “국가생산계획도 잘 못 맞추는데 인재 양성은 국가에서 제 나름대로 계획한다고 하지만 탁상계획이 많다”고 표현한다.<sup>206</sup>

또한 북한에서는 입직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직장 배치 이후에 이루어진다. 일반중등학교가 계열별로 분화되어 있지 않고 학교교육 이외에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중등학

<sup>205</sup> 전병유·이일영·김연철·양문수, 『북한의 시장·기업 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pp. 19-20.

<sup>206</sup> H2, 함경북도 대학 교원(1979-2001), 조정아 면담(2005년 11월).

교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또한 직업과 직장 배치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능력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좁기 때문에 학교와 생산의 장인 직장을 연계하는 노동력 배치의 구조는 결정적인 구조적 결함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과는 다른 직장에 배치된 노동자들은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노동 자체의 의욕을 상실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 주민의 증언이 그러한 예이다.

북한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성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아요. 대체로 졸업을 하게 되면 집단 배치가 많이 돼요. 그때 배치를 받는 아이들의 소원은 무엇인가, 자기가 군대를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소원이예요.

...

북한에서 일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마지못해 일했거든요. ... 사람이 일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한 번 그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업을 싫든 좋든 해야 되거든요.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었거든요. 북한에서의 직업은 내 생각하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sup>207</sup>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간부양성소 등을 졸업한 고급인력인 경우에도 배치의 과정에 행위자들 간의 '홍정'이 작용한다. 이러한 홍정은 주로 당 권력과 관계있는 경우에 유효하며, 자신이 전공한 부문에 배치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 홍정의 과정에서 밀려나면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배치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그러한 예이다.

---

<sup>207</sup> K5, 함경북도 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1981-1999), 조정아 면담(2005년 8월).

못 가는 경우도 있지요. 무역학과 우리 학급에도 60명이 있었는데 무역 부분에 간 사람은 17명 밖에 못 갔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지방에 보내서 양성위원회 그런 부분 가서 쌀이나 공급해주는 지도를 하고, 검찰, 감찰, 안전 부분에 가고, 돈이라도 좀 있다든가, 자기 친척 중에 든든한 간부가 있다든가 하면, “야 내 조카인데 한 번 봐주라”하면 공부를 대학 때 못 했어도 무역기관에 가는 거지요.<sup>208</sup>

이미 호텔부문에 사람들이 다 차 있잖아요. 양성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뭐 도에서 배치하는데, 다 천한 권력이지만 사람들은 다 그런데 가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자식들이 나 가죠. ... 그래서 편직공장으로 가게 됐어요.<sup>209</sup>

고급인력이나 특수부문 인력이라 하더라도 배치의 과정에서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배치를 받을 경우 적성을 고려하여 이직을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기술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능공학교와 같은 양성훈련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기술을 갖추지 못한 예비노동력에게 특정한 분야의 기술을 갖추어줌으로써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기술교육의 부족과 일방적인 배치로 인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양성훈련은 대부분 개별 공장, 기업소로 직장 배치가 완료된 이후에 공장 부설 양성훈련기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북한의 학교와 직장 간 연계 체계는 중등학교에서 개인의 직업적 적성의 개발과정이 진행되지 못한 채 직업을 선택하여 직장

<sup>208</sup> K3, 인민경제대학 졸업(1983), 한국교육개발원 면담(2003년 6월).

<sup>209</sup> L3, 대외봉사 간부양성소 졸업(1977), 함경북도 공장노동자(1977-1998), 조정아 면담(2005년 8월).

에 배치되고, 특정한 직장에 소속된 상태에서 양성소의 직업훈련 과정을 거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직이 어려운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 VI

## 결론: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는 정책적, 내용적 측면과 그 실질적 운영 면에서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국가가 주요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고 운영을 총괄하지만 실질적인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은 국가 예산만이 아닌 대중 동원을 통해 확보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간에 노동인력 개발 체계를 확장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력개발 체계의 질적 발전에 제약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 노동력 개발 체계의 가장 중요한 내용적 특성은 노동과 교육의 결합이라는 종합기술교육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등학교의 기초기술 및 실습 교과는 실습 여건이 열악하고 교육과정 비중이 작기 때문에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생산노동은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현장실습이 아닌 단순한 노동력 보충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셋째, 공장 내 노동인력 개발 체계로 다양한 현장훈련제도와 공장 대학 등 직장 부설 정시제 교육기관이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과정의 불안정성과 노동문화 등의 행위자 요인,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하여 노동인력 개발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노동인력 양성과 배치가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계획과 실제 노동력 수요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또한 중등학교에서 적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직을 위한 양성훈련이 직장 배치 이후에 이루어진다. 직업과 직장 배치 과정에서 직업과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좁고 행위자들간의 ‘홍정’의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북한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특성은 향후 노동인력 개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노동인력 개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의 첫 단계는 경제난 이후 파괴된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인프라를 복구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대북지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는 사회주의적 인력 개발 제도가 지니는 평등성이나 국가의 책임성 등의 장점마저 상실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력 개발 분야의 대북지원에 있어 인력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 파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 부문의 대북지원은 ‘어린이’에 대한 ‘일반구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대상을 청소년 및 성인층으로 확장하고, 사업 성격 면에서 개발지원과 상호교류로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수혜자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행동을 그들 자신들이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참여적 개발”<sup>210</sup>을 원칙으로 개발 지원 전략과 과제를 설정해야 함으로써 소모적인 지원이 아니라, 노동인력 개발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초기의 교류와 협력은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지니지 않으면서 북한 측에서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이 인력 개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IT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

<sup>210</sup> Deborah Eade & Suzanne Williams, *The Oxfam Handbook of Development and Relief* (Oxfam Publication, 1995); 이종무, “대북 지원사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모색,” 『2004년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에서 재인용.

둘째, 현재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노동인력 개발에 있어서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의 특성 및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관과 노동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의 노동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남한의 기업에서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포함하는 전체 공장 체제와 행위자 역동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노동인력 개발에 대한 북한의 국가적 통제를 적절히 견제하면서 실질적인 인력개발의 기반과 조건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북한에 진출할 기업들의 인력개발과 관련된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국가의 계획화 과정에 대한 기업을 비롯한 하부단위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국가와 당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이 부분적으로 지배인으로 이전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sup>211</sup> 이러한 변화는 기업소의 노동인력 양성체제와 그를 둘러싼 노동자 및 관리자들의 대응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는 기업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마찬가지로 인력양성 및 개발에 관한 국가적 관리와 통제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며, 남북경제교류나 남한 기업의 북한진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인력 개발에 있어 개별 기업의 자율성의 여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인력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넷째, 북한 진출 기업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 개발에 있어

---

<sup>211</sup> 이석기,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위기,” 『남북한 역사발전과 북한 경제』 (한신대학교 학술원 사회과학연구소, 2004).

개인의 기술 개발과 노동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와 자극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노동 능력 향상을 위한 유인은 사회적 동원과 경쟁운동이라는 정치적 형태를 띠지만, 이러한 정치적 인센티브는 경제난 이후의 공장 상황 속에서 그 효과가 격감하였다. 노동자들에게 기술 및 노동능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동기와 자극을 부여하는가의 문제가 노동인력 개발의 관건이 될 것이다.

임금이라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지니는 유인효과가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경제적 유인 이외에도 인력 개발 자체가 지니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는 국가와 집단이 중심이 되며, 특히 ‘개인의 개발’을 위한 영역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기술 향상이나 경력 개발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밖에 없다. 인력 개발에서 ‘개인의 개발’을 위한 영역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현재 직무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미래 직무와 학습자 자체의 개발과 연계<sup>212</sup>시킴으로써 교육훈련 자체가 갖는 유인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

<sup>212</sup> L. Nadler & Z. Nadler. *Developing Human Resources* (San Francisco: Jossey Bass, 1989).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국문>

- 강일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 강일규 외.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강일규·김덕기·이은구.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 방안 연구』. 서울: 직업능력개발연구원, 2002.
- 국토통일원 편.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Ⅱ편』.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최고인민회의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북한 노동력 팽창과정과 전문가양성』. 서울: 국토통일원, 1974.
- 권이종 외. 『통독전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원대학교 독일통일교육과정연구위원회, 1995.
- 기든스·윤병철·박병래 역. 『사회이론의 주요 쟁점』. 서울: 문예출판사, 1978.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서울: 한백사, 1990.
- 김희영·한만길 엮음.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서울: 우리교육, 1999.
- 레빈. 김용기 역. 『오늘의 소련교육』. 서울: 신조문화사, 1964.
- 맑스. 김영민 역. 『자본 I-2』. 서울: 이론과 실천, 1990.
- \_\_\_\_\_. 『맑스 엥겔스 교육론Ⅱ』. 서울: 한울림, 1988.
- 선한승·문무기·윤문희·이종원·김진환. 『북한인력에 관한 법제 실태와 활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알튀세. 이진수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레닌과 철학』. 서울: 백의, 1995.
- 애플. 박부권·이혜영 역. 『교육과 이데올로기』. 서울: 한길사, 1985.
- 오길남. 『북한의 노동력 구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6.
- 이돈희 외. 『남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및 구조 비교 분석 연구』.

-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2001.
-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자즈다. 김동규 역. 『소련의 학교교육』. 서울: 주류, 1984.
- 전병유·이일영·김연철·양문수. 『북한의 시장·기업 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1.
- 최영표.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8.
- 최종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캐슬·뷔스텐베르크. 이진석 역. 『사회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푸른 나무, 1990.
- 크롭스카야. 한신대학 제3세계문화연구소 역. 『크루프스카야의 국민교육론』. 서울: 돌베개, 1989.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 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한만길 외. 『북한의 경제발전과 교육의 역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 \_\_\_\_\_. 『북한 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 <북한>

- 강근조. 『조선교육사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교육학분과 집필위원회. 『교육학: 사범 전문 학교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0.
-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 김성우 외. 『문학 5』.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김수진. 『주체의 교육론』. 동경: 학우서방, 1992.
- 김완선 외. 『공산주의도덕 4』.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_\_\_\_\_. 『공산주의도덕 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 \_\_\_\_\_.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 김정일. 『과학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김창호. 『조선교육사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 남진우 외. 『사회주의교육학』.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1.
- 리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 리영환. 『조선교육사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_\_\_\_\_. 『조선교육사 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 리창근. 『우리당에의한 로동행정 이론의 심화발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백남룡. 『벗』. 평양: 문예출판사, 1988.
- 백진규. 『주체의 로동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정성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테리대군의 양성』.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집필위원회. 『교육학(사범대학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9.
- \_\_\_\_\_.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 교육의 발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 한상유 외. 『공산주의도덕 3』.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영문>

- Bereday. G., W. Brickman & G. Read. *The Changing Soviet School*. Cambridge: The Riverside Press, 1960.
- Bernstein. B.. *Class, Codes and Control*. London: Routhledge & Kegan Paul, 1975.
- Bowen. J.. *Soviet Education: Anton Makarenko and the Years of Experiment*.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3.
- Burawoy M..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Thetford Press Ltd, 1985.
- Fishman. S. & L. Martin. *Estranged Twins: Education and Society in the Two Germanies*. New York: Praeger, 1987.
- Fitzpatrick. S..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London · New York ·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79.
- Krechetova, E. & H. B. Redl (ed). *Soviet Educators on Soviet Edu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4.
- Lechner. M. *Training the East German Labour Force*. Heidelberg: Physica-Verlag, 1998.
- Medlin. W. K., C. B. Lindquist & M. L. Schmitt. *Soviet Education Programs*.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60.
- Nadler. L. & Z. Nadler. *Developing Human Resources*. San Fransisco: Jossey Bass, 1989.
- Phillips. D. & M. Kaser (eds). *Education and Economic Change i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allingford: Triangle, 1992.
- Pritchard Rosalind. *Reconstructing Education: East German Schools and Universities after Unification*. New York · Oxfoed: Berghahn Books, 1999.
- Rust. V. D. & D. Rust. *The Unification of German Education*. New York & Lodon: Garland Publishing, 1995.
-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DPRK*, 2003.

## 2. 논문

### <국문>

-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 정당화 담론.”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김기석.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연구.” 『교육이론』. 제10권 제1호.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연구소, 1996.
- \_\_\_\_\_. “해방 후 분단국가교육체제의 형성. 1945-1948: 국립서울대학교와

- 김일성종합대학의 등장을 중심으로.” 『사대논총』. 제53집.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96.
- \_\_\_\_\_. “제도교육, 그 신화와 실상 탐구.” 『교육사회학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87.
- 김선호. 『북한의 대학교육 : 생애교육의 이론과 실제』. 『북한학보』. 서울: 제3집, 1979.
- 김지수. 『북한 교육관료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송경준. 『북한의 IT교육 현황과 특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효숙. “북한사회의 변화와 고등인력의 양성과 재편(1945-1960).” 『현대북한연구』. 제8권 2호. 서울: 한울, 2005.
- \_\_\_\_\_. “소군정기 북한의 교육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양문수. “북한경제의 발전과 낙후 및 회생모색기: 1971-2002”, 『북한 60년의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2.
- 이석기.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위기.” 『남북한 역사발전과 북한경제』. 한신대학교 학술원 사회과학연구소, 2004.
- 이윤미. “사회주의 종합기술교육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소련,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은영. 『북한공장대학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종무. “대북 지원사업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모색.” 『2004년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
- 이향규. “북한 과학기술자의 양성.” 『과학문화연구센터 2001년도 연구논문집』, 2002.
- \_\_\_\_\_. “해방 후 50년간 남북한 교육기회의 확대 과정과 특징.” 『한국교육사고 연구노트』. 제14호.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2000.
- \_\_\_\_\_. 『북한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1945-195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정혜정. “북한 집단주의 교육과 J. Dewey의 개인주의 교육에 나타난 근대성과 사고교육의 비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조정아. “북한 공장의 기술인력 양성체제의 형성.” 『북한연구학회보』. 8권 2

- 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4.
- \_\_\_\_\_.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14권 1호. 서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4.
- \_\_\_\_\_. “‘직업적 혁명가’와 ‘동요하는 인테리’ 사이에서: 북한의 교사상과 교원의 사회적 지위.” 『현대북한연구』. 7권 2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4.
- \_\_\_\_\_. “북한 종합기술교육의 도입과 전개.” 『교육사회학연구』. 13권 1호. 서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3.
- \_\_\_\_\_. “산업화 시기 북한 공장의 노동규율 형성: 교육과 동원의 결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7권 1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3.
- \_\_\_\_\_.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차문석.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 생산 체제.” 『통일문제연구』. 제15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차유규. “북한의 교육 개발 방향과 전략.” 『평화를 위한 우리의 한반도 정책 대구상』(통일문제연구협의회 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최종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북한>

- 강영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진행된 전후복구건설 준비단계의 로동계급의 투쟁.” 『력사과학논문집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교원신문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대학교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온 위대한 령도(1).” 『교원선전수첩 1』. 평양: 교원신문사, 2003.
- \_\_\_\_\_. “컴퓨터수재양성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교원선전수첩 2』. 평양: 교원신문사, 2003.
- 권대경. “5년제중학교는 어떠한 성격의 학교인가.” 『인민교육』. 4호, 1967.
- 김일성. “외국어교육을 더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80년.” 『김일성저작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일성저작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 \_\_\_\_\_.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4차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62년 10월 16일).” 『김일성저작선집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 \_\_\_\_\_.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전국교육일군열성자 대회에서 한 연설, 1961년 4월 25일).”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 \_\_\_\_\_. “당사업방법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김정일.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잘 꾸릴데 대하여.” 『과학교육 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 림주식. “인민 교육 체계 개편에 따르는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임무.” 『경제 건설』. 제12호, 1959.
- 리국순. “홍남 비료 공장 로동자들이 걸어 온 승리의 길.” 『력사논문집 4: 사회주의 건설편』. 평양: 과학원 력사연구소, 1960.
- 리증옥. “로력 후비 양성 사업의 발전.” 『로동』. 제9호. 1958.
- 리혁수.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로동』. 제5호. 1959.
- 보통교육부 교육방법국. “새학년도 교육강령집행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인민교육』. 9호. 1994.
- 서명선. “공장대학 영어기초교육단계의 문법교수에서 나서는 교육학적 요구.” 『교원선전수첩 2』. 평양: 교원신문사, 2003.
- 서춘형. “전기기본과목내용과 교재 취급방법.” 『인민교육』. 2호, 1973.
- 안상록. “기술 기능 향상 사업을 생산에 선행시키기 위하여.” 『경제건설』. 제12호. 1959.
- 전성근.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는 새로운 형의 학교이다.” 『기술교육』. 제1호. 1960.
- 정순도. “금속 공업 부문 기능공 양성에서 주되는 문제.” 『로동』. 제10호. 1959.

- 정시원. “생산에서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경제지식』. 제11호. 1960.
- 정은모. “기술학교 체계에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결합.” 『기술교육』. 제4호. 1963.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각해년도.
-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본부 교육부 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 규정 자료집』. 동경: 학우서방, 1957.

### <영문>

- Bertsch, G. K. & K. L. Persons. “Worker’s Education in Socialist Yugoslavia.”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February 1980.
- Kim, Sun-Ho. “Education in North Korea: Technical, Manpower and Industrial Development.” (Ph. D. dissertatio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1971).
- Morison, J. “Recent Developments in Political Education in Soviet Union.” G. Avis (ed.). *The Making of the Soviet Citizen*. London · New York · Sydney: Croom Helm, 1987.
- Yang, A.. “Red and Expert: Communist China’s Educational Strategies of Manpower Developmen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65).
- Yang, K. P. & C. B. Chee. “North Korean Educational System: 1945 to Present.” R. A. Scalapino (ed.). *North Korea Today*. New York: Praeger, 1963.
- Zeng, Y., G. Li & T. Wu. “Worker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Continuing Education*. vol. 37. No. 40, 1988.

### 3. 정기간행물

『로동신문』

- 『교원선전수첩』
- 『교원신문』
- 『교육신문』
- 『조선중앙방송』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 I )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 I )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 I )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복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